


「사회주의자」 주최 토론회

사회주의자가 바라보는 여성해방



_일 시 : 2018년 8월 31일(금) 저녁 7시

_장 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정동 경향신문사 빌딩 13층)



사·회·주·의·자·가·바·라·보·는·여·성·해·방

토론회 취지

『사회주의자』는 2016년 10월 창간되어, 명확한 사회주의 관점을 표방하며 온라인 기사 제공 및 월 1회 오프라인 잡지 발간을 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본 매체에서는 페미니즘의 논의를 사회주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2017년 “사회주의로 페미니즘 읽기”, “사회주의로 바라보는 페미니즘 개념” 연재기사 기획 등을 통해 여성해방에 대한 사회주의 관점을 제시하고 건설적 토론을 촉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대되어 왔고 ‘Me Too’ 운동,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등 여성억압에 맞선 대중적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 문제에서 남성을 배제하는 경향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쟁도 여성운동 내부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억압과 여성해방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진보 운동, 사회주의 운동 내의 토론은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금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와 그 근본 동력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 여성이 삶에서 느끼는 각종 억압과 차별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방법을 고민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순서

19:00~19:20 발제

19:20~19:50 토론자 의견 발표(1인당 10분)

19:50~20:00 휴식

20:00~21:00 질의 및 자유토론





다들 주제

기본주제

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해방

- 세부주제

1. 지금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 및 그 근본 동력은 무엇인가?
 2.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설명하는 여성억압
 - 2.1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2.2 여성억압과 다른 억압과의 관계, 어떻게 보아야 할까?
3.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과제는 무엇인가?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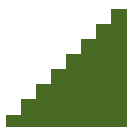
이기범 (『사회주의자』 편집위원)

발제자

김민재 (『사회주의자』 기자) 5

토론자

- 이지완 (『사회주의자』 기자) 46
- 나 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62
- 유현미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사건 대학원대책위원회) 80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는 지금,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말한다

김 민 재

『사회주의자』 기자

지난 5월 19일,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에는 1만 2천 명이 모였다. 참가자 수는 6월 9일에 2만 2천여 명으로, 7월 7일에는 6만여 명으로 늘어났다(모두 주최측 추산 인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열리는 3. 8. 여성의 날 집회를 제외하고는 여성억압 문제만을 의제로 한 집회가 개최되는 일 자체가 흔치 않았다. 그 집회에 몇 만 명이 나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웠다. 오늘 토론회 발제문에서는 지금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 및 동력이 무엇인지를 짚어 보고, 여성억압에 대해 사회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즉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말하고자 한다.

1. 지금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 및 그 근본 동력은 무엇인가?

가.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은 확대 강화되고 있다.

여성들은 불법촬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비록 같은 날 혜화역에서 진행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보다는 적은 인원이나, 7월 7일 광화문에서도 형법상 낙태죄 폐지 집회가 경찰 추산 1500여 명,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으로 힘 있게 진행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올해 초의 ‘Me Too’ 운동 이래로 일터나 학교에서의 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학교, 직장에서 받는 공격이나 탄압에 당당하게 대응하기도 한다.¹⁾ 애초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갖고 SNS상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있기에 ‘백래시’도 그만큼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많은 활동가들은, ‘여성 인권이 우선’, ‘우리는 여성만 챙긴다’를 주장하며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보적이지 못한 입장을 보이는 세력이 이전보다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최근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한국 여성들의 공포, 안전을 내세워 예멘 난민 보호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정혜실, 「칼럼」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청와대 청원 사태를 지켜보며, MWTV, 2018. 6. 18. 참고)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그들의 ‘여성 우선’ 입장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진보적 담론을 전혀 학습한 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여성해방운동이 폭넓게 확대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요컨대 현재 여성해방운동의 확대, 강화는 새로운 사람들이 여성해방운동으로 유입되어 그 주체로 형성될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이 확대 강화되는 이유 및 근본 동력

(1)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누적된 여성억압

한국 사회에서 여성억압이라는 모순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동력이다.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하고 여성억압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2015년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각종 여성억압은 당연히 훨씬 이전부터 심각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1)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일터, 학교 등에서 일어나는 비난, 공격, 폭력 사례를 수집하여 발표했다. 라운드테이블 자료집에는 ‘백래시’ 때문에 위축되었다는 사례들(24건)도 다수 있었지만, ‘백래시’ 이후 오히려 ‘페미니스트로서 더 당당해졌다’는 사례들(27건) 역시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만연함, 그런 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분위기, 빈곤에 내몰려 성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들 중 압도적 다수가 여성인 것, 형법상 낙태죄 때문에 여성이 자기 몸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임금격차,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나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고 외모 꾸미기를 중용하는 대중 문화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2012년 10월부터는 일베가 언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들이 온라인에서 자행하는 여성에 대한 언어폭력, 범죄 모의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여성혐오’라는 단어로 사실상 대체되다시피 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어떻게 보면 어감이 상당히 강한 ‘여성혐오’가 여성억압 일반을 총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은 현상은, 여성들이 느끼기에 여성에 대한 일상적 차별과 폭력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여성억압이라는 모순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기에, 2015년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SNS 선언,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등장과 함께 여성해방 운동의 상승기류가 시작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 심화로 인해 더 힘들어진 다수 여성 청년들의 삶

그리고 여성들이 위와 같은 억압적 현실을 더 고통스럽게 느끼게 된 배경에는,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 심화로 인해 다수 여성들의 삶이 실제로 더 힘들어졌다는 점이 있다. 특히 지금 여성해방운동으로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20대~30대 여성 청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2008년에 발생한 미국발 세계공황 이래로 세계 자본주의는 계속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 상황도 좋을 리가 없다. 한국 경제가 침체국면의 초입이라는 이야기는 올해 상반기부터 공공연하게 나왔다. 7월 22일자 연합뉴스 기사 「경기하강 신호?...제조업 재고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에 따르면 5월 제조업 재고율(2015년=100)은 108.7로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 하락도 동반되고 있어서 더 큰

2) 월말 재고(생산분 중 팔리지 않고 남은 것)를 월중 출하(생산분 중 시장에 내다 판 것)로 나눈 값.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수출도 0%대 증가율에 머물렀고, 설비투자는 6.6%나 떨어지며 9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파이낸셜뉴스, 「부진한 2분기 성장률, 왜」, 2018. 7. 26.).

특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0대의 실업률이 9.1%나 된다. 6월 3일자 경향신문 기사 「배고픈 청년들, 끼니 걱정하며 사는 알바 인생」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2만원에 불과하다. 위 기사에서 인용한,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에 해당하는 30세 미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8만1000원이다. 설상가상으로 부채까지 증가하여, 2010년 이후 7년 동안 30세 미만 청년의 부채는 154.8%나 급증했다.

여성 청년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6년 11월 기준 20대 여성 실업률은 7.3%였는데, 이를 두고 ‘1999년 이후 최악’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20대 여성 실업률은 2017년 6월 7.9%였고, 현재(2018년 6월)는 7.8%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게다가 한국여성정책원에 따르면 청년여성의 전체 일자리 중 비정규직 비율은 35.4%나 된다(동양일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여성」, 2016. 8. 18.). 일자리를 가진 여성 셋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또한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구직 경험이 있는 여성 회원 5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취업장벽이 더 높다’는 점에 93%가 동의했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 72%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파이낸셜뉴스, 「여성 청년구직자 93% “취업장벽 너무 높다”」, 2017. 1. 25.).

물론 최근 여성해방운동에서 주로 제기되는 성차별적 문화의 문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각종 폭력의 문제는 경제적, 물질적 삶의 어려움과 관련이 적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그런 문제에 더 분노하게 되는 배경에는 분명 물질적 생존 자체가 녹록치 못한 현실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2017년 2월 초 SNS를 중심으로 퍼졌던 ‘#이게_여성의_자취방이다’ 해시태그 사건에서도 이런 배경을 읽을 수 있다. 이 해시태그는 한 사진작가가 자취방을 배경으로 여성 모델이 성적인 포즈를 취한 <자취방>이라는 사진집을 발간하겠다고 홍보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성적 대상화하는 데 항의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실제 자취방 사진을 이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해시태그는 점차, 혼자

자취하는 여성을 성적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 환경에서 정말로 성폭력 범죄를 당할 뻔했던 경험 등을 토로하는 장이 되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임대료, 보증금이 더 비싼 집을 선택하게 되는 현실이 화가 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물론 주된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여성의 생활공간까지 성적 대상화하는 성차별적 문화였지만, 만약 다수의 여성들이 혼자 살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해시태그는 그 정도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분포(2016년 기준)를 보면,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은 남성 1인 가구 중에는 29.5%인데 반해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56.9%나 된다.³⁾ 각종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취업 준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다 취업이 되더라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하필 여성이라서 그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생각이 들 때 여성억압에 대한 자각, 분노가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여성들 스스로 '자본주의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그래서 나는 여성해방운동에 참여한다'고 의식하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차별적 문화를 없애고,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고, 남성과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운동에 참여한다. 다만 그들이 그런 성차별과 여성억압을 더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는 배경에 물질적 생존이 불안정한 상황,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 심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촛불집회와 박근혜 퇴진으로 획득된 민중의 자신감

또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들의 저항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이어지며 오히려 계속 확대 강화되어 온 동력은, 촛불집회와 박근혜 퇴진을 계기로 민중이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촛불집회

3) 물론 여성 1인 가구 중에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기에 이는 20대, 30대 여성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한겨레신문, 「여성 1인가구 10년새 80만 증가... 10명중 6명, 월 100만원 못번다.」, 2017. 6. 27.

이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학교, 일터 등 삶의 현장을 ‘광화문 광장’으로 만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상 속 여성억압에 대한 문제제기 특히 '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사상 최대 규모 촛불집회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든 시민들은 당시 광장에서 얻은 경험을 일상으로 끌어오고 있다. ... 탄핵 이후 시민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불거지는 불의와 불공정에 더는 침묵하지 않는다. ... 최근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미투’ 열풍도 촛불집회와 탄핵 경험의 연장선에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의와 인권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불의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문화가 확산한 결과 ‘미투’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직장인 신모(31) 씨는 ... “이전 정부에서처럼 권위주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을 때는 이런 식의 고발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촛불을 거치면서 권력자도 잘못했을 때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탄핵 1년]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 ... 불의·불공정에 침묵 없다」, 2018. 3. 8.)

요컨대 촛불집회와 박근혜 퇴진 이후 민중은 일상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자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여성들 역시 예전 같았으면 혼자서 그냥 넘어갔을 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목소리를 내고 사람을 모은다. 아시아나 항공의 여성 승무원들은 ‘박삼구 회장의 성희롱을 더 이상은 참지 말자’며 용기를 내어 직장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세계일보, 「아시아나도 ‘미투’...박삼구 회장 “기 받으러 왔다”며 여직원과 포옹, ‘회장님 환영조’ 등 폭로 나와」, 2018. 2. 2.). 여성 간호사들에 대한 ‘장기자랑 강요’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춘천 성심병원에서는 언론보도 이후 회사에 협조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줄어들고,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의 조합원 수가 10명에서 307명으로 급증하는 일이 일어났다(헤럴드경제, 「간호사에 선정적 춤 강요 논란 춘천성심병원 ‘노조가입 탄압」, 2017. 12. 4.).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의 동력이 소진되기는커녕 계속 강력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감을 획득한 여성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설명하는 여성억압

성차별, 성폭력, 각종 여성억압 문제를 이야기할 때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비교적 친숙해도,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어색하게 들릴 것이다. 이제부터 소개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여성억압 문제 및 여성해방을 성취할 방법에 대한 사회주의의 입장을 가리킨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억압 문제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 발전이라는 총체적인 틀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생산은 인간이 자연에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켜서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을 얻는 노동과정을 의미한다.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직접적 생산자와 생산수단(노동대상, 노동수단이 여기 포함된다)이 결합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노동력의 수준과 노동수단의 효율성에 따라서 생산성의 정도가 달라지며, 이것을 생산력이라 한다. 한편 생산과정에서 인간들이 맺는 관계를 생산관계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접생산자인 임금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고용관계를 맺고 생산수단과 결합하는데 여기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가 생산관계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에 조응하여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대체 여성이 겪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왜 물질적 생산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1)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 왜 중요한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이 확대, 강화되는 중요한 근본 동력 중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계속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온, 여성억압이라는 모순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여성억압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왜 발생한 것인가?’라는 질문도 떠오른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 여성억압을 역사적 산물로서 인식해야 여성억압이 없어진 사회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답을 시도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이용한 설명이었다. 본래 인류학적 용어로 쓰이던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케이트 밀렛 등의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여성억압적 사회구조를 지칭하는, 페미니즘의 중심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가부장제’가 왜 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대답이 제시되지 못했다(별첨 1) 참고). 여성의 임신, 출산 가능성을 남성이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여성이 임신, 출산을 하면서도 남성과 평등하게 살았던 시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노동자와 자본가계급이 공모하여 여성을 일터에서 쫓아내고 집 안에서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하도록 한 탓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차별받게 되었다는 대답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왜 그들이 그런 공모를 했으며, 왜 일터에서 쫓겨나 집에 남은 게 남성이 아닌 하필 여성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성별로 나누어 분할통치하려는 등의 이유로 ‘가부장제’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이야기 역시 ‘가부장제가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잘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는,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기능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달리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여성억압의 출현을 설명하는 틀을 제공했고, 후대의 맑스주의 인류학자들이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2) 여성억압의 기원

① 여성과 남성이 평등했던 사회

많은 인류학자들은 수렵 채집 사회 및 초기농업 사회에서 여남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평등했음을 밝혀냈다(‘원시 공산주의’ 사회). 2014년에 옥스퍼드 대학출판부에서 나온 인류학 연구서⁴⁾에도 “소규모 수렵-채집 공동체들은 십중팔구 사회적 지위에

4) Peter Jordan and Vicki Cummings, “Introduction to Prehistoric Hunter-Gatherer Innovations”,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of Hunter-Gatherers*, Oxford University

있어 두드러진 격차가 없는 평등 사회였을 것이며, 사적인 부의 존재나 위풍재(威風財)의 축적에 대한 증거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물론 남성(수렵)과 여성(채집) 사이의 노동 분업은 어느 정도 존재했다. 그렇지만 이는 오늘날의 불합리한 성별 노동분업과 같은 사회적 억압이 아니었다. 노동 수단, 의학 지식 등이 미발달한 생산력 수준에서 이런 분업은 자연적, 객관적 조건에 대한 적응이었다. 무엇보다 여성이 주로 하는 채집이 식량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 이상이었기에, 사회적 생산에서 여성은 남성 이상의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다. 이 역시 엘리너 버크 리콕(Eleanor Burke Leacock) 등 많은 인류학자들이 참여 관찰 연구를 통해 밝혀냈고 오늘날에는 인류학계에서 많은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다.

② 생산의 발전으로 인한 성별 노동분업의 성격 변화

그런데 생산력이 발전하고 중농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과거에 사용하던 농기구(괘이, 뒤지개)보다 신체적 근력을 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구(쟁기)가 사용되는 등 농업 기법의 전환이 발생하였다. 동시에, 수렵 채집을 하며 유랑생활을 할 때와 달리 초기농업 사회부터 점차 정주생활을 하게 되자 굳이 출산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임신 상태로, 혹은 수유를 하며 보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여성들은 서서히, 사회적 생산에서 남성에 비해 부차화되었다.

이렇게 남성이 주된 식량생산자 역할을 하고, 여성들은 집 안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식의 성별 노동분업은 여남 모두 사회적 생산 자체에는 동등하게 참여했던 이전의 분업과는 달리 여성억압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요컨대 생산이 발전하여 중농업 사회로 접어들자 성별 노동분업의 성격이 여성억압적으로 변화한 것이 바로 여성억압의 근원이다.

Press, 2014, p 590. / Sandra Bloodworth, “The origins of women’s oppression—a defence of Engels and a new departure”, *Marxist Left Review* No.16 Summer 2018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함.

③ 여성억압과 동시에 출현한 계급 억압

동시에 생산의 발전은 잉여생산물과 사적 소유 역시 출현시켰고 이는 계급과 국가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주된 식량생산자가 남성이기에 잉여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것 역시 남성이었다. 이에 따라 지배 계급은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가구 단위의 생산과 소비를 지휘하여 잉여생산물을 지배자들에게 바칠 책임을 부여했다. 이는 가구 내에서 연장자 남성이 가족 구성원들의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는, 인류학적 의미의 ‘가부장제’ 구조를 강화하였다.

(3) 자본주의 하 여성억압

이렇듯 계급과 함께 출현한 여성억압은 역사적으로 그 형태를 달리 해왔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여성 억압과 가족의 형태는 큰 변화를 겪었다. 법제도적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노골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다수 여성들의 삶은 힘들다. 예를 들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월평균 임금 기준 36.8%, 시간당 임금 기준 30.7%였으며, 남성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3.6%인데 반해 여성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1.2%였다(KWDI Brief 제48호, 2018. 7. 12. 발행). 여성들은 일자리를 구해도 저임금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고, 남성만큼 일을 해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오랫동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남성, 집안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모델 하에서 가사노동과 양육을 전담하도록 압박을 받아 왔고, 심지어 임노동을 하더라도 ‘반찬값 정도 벌러 나온 사람’이라는 편견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는 단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다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있어 온 현상이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가사노동 및 양육 전담의 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의 뿌리를 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자본주의가 확립되기 시작하던 초기 산업화 시대의 영국의 상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남성만 임노동을 하고 여성은 가사, 육아를 전담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본가들은 성인 남성으로도 모자라 여성에 더하여 아동까지 고용했고, 아이까지 포함하여 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임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해야만 노동자 가족

이 생활을 겨우 꾸려갈 수 있었다.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아동노동이나 여성노동을 제한하는 보호입법이 이루어지고, 남성 노동자가 생계부양자임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가족임금제가 확립되었다. 여기서 왜 하필 (여성이 아닌) 남성이 임노동을 하며 가족임금을 받아 아내, 아이들을 부양(남성 생계부양자 모델)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

① 당시 노동자들의 상황: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기를 필요성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았다. 일할 수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루에 기본 12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과 식사 시간을 합쳐 14시간~15시간 임금노동을 해야만 겨우 생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노동 역시 꼭 필요했다. 아동들의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이렇다 할 노인 복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노후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사망률도 높았다. 결론적으로 당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적게 낳는 것보다는 많이 낳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여성이 전일제로 공장노동에 참여해야 할 경우 아이들을 제대로 낳아 기르는 것이 어려웠다. “여성들은 출산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기계로 돌아가야 했다. 어린 아기는 모유가 아니라 멸균 죽을 먹었다. 아직 너무 어려서 일할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말은 아이들에게 아편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먹여 아이들이 얌전히 있게 만들었다.”⁶⁾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할 경우 수유의 대안은 우유를 먹이는 것이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유모에게 아기를 맡기는 것이었는데, 전자는 유아사망률을 증가시켰고, 후자는 유모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아이들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더 나은 어머니들은 보호입법 도입 이전에도 이미, 전일제보다는 시간제노동, 가내노동, 계절노동, 기숙노동 등의 방법으로 양육과 노동을 동시에 하려고 시도했다.

5) 이하의 내용은 조안나 브레너, 마리아 라마스의 글 「여성억압의 재고찰」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글은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미셸 바렛 외, 여성사, 1995)에 실려 있다. 그리고 [별첨 2]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므로 이 글도 참고해주시기를 바란다.

6) 린지 저먼, 『여성과 마르크스주의』

요컨대 당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길러야 했고, 갓 태어난 아기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기에, 가족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장시간 노동에서 제외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다.

② 여성, 자본주의 생산방식 속에서 열등한 노동력으로 고착되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도입과 함께, 대다수가 월경 및 임신, 출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집단인 여성 집단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자 입장에서 열등한 노동력으로 고착되기 시작했다. 여성억압이 발생하기 이전 수렵채집 사회와 초기 농경 사회에서도 여성들은 똑같이 월경, 임신, 출산을 했지만 그들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열등한 노동력으로 취급되는 일은 없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생산과 월경,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식, 초기 양육(수유 등)의 필요가 양립 가능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종속이 시작된 이후인 중세 봉건 경제 시기에도, 전반적인 노동강도는 매우 높았지만, 여성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월경, 임신, 수유 등의 이유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었다. 착취자가 존재했지만 생산과정, 노동과정 자체는 장인 및 가내 노동자들 스스로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관계 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노동력으로 고착화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노동자들로부터 생산과정, 노동과정에 대한 이러한 통제권을 빼앗아간다는 특징을 가진다. 매뉴팩처 단계에서 기계제 대공업으로 이행하면서 노동의 형식적 포섭은 실질적 포섭으로 바뀌었고, 노동자들은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서 노동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본가가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명의 여성 노동자가 수유 등의 이유로 쉬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 필요를 전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처럼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물론 똑같이 기계를 이용한 대규모 생산을 하더라도,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권이 자본가들이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에게 있어서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를 위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들은 기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유급 생리휴가, (부모 모두를 위한) 출산휴가, 무료 탁아소 등을 통한 육아 부담의 사회화,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윤을 위한 생

산을 하는 자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노동자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기계를 돌리는 속도는 가능한 한 빨라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전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달리 임신, 출산과 같은 생물학적 인간재생산의 필요와 충돌한다.

그렇기에 대다수가 월경 및 임신, 출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집단인 여성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기에 열등한 노동력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자본가가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거나, ‘남성으로서의 이해관계’를 관찰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성맹적(gender-blind)이었기 때문이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노동자의 성별이 무엇이든, 노동자가 월경, 임신, 출산을 하든 말든 자본가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굳이 신경을 쓸(그래서 휴식, 유급 생리휴가, 출산휴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공할) 이유도 없었다.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성 그 자체 때문에 역설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노동력으로 고착화된 것이었다.

③ 여남 노동자들이 가족임금, 보호입법을 요구했던 이유

19세기 초에 최초로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영국 노동계급의 요구는 성별을 막론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일 단축이었지만, 당시 노동계급의 힘은 그 정도의 요구를 관철시킬 만큼 강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 변화된 전략은 아동노동 시간 단축을 요구함으로써 성인 노동자의 노동시간도 간접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을 거쳐 1833년에 통과된 법안은 아동노동자를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지속시키는 안이었다. 시간단축운동 진영은 결국 이러한 몇 번의 실패를 겪은 후 1840년대에 들어서야 여성 노동자의 노동일 축소를 요구안으로 걸었다. 조직적 운동력, 토리당과 휘그당의 갈등, 1847년의 방직업 침체로 인해 방직업주의 저항력이 약화된 점 등 정세적 요인으로 인해 이 운동은 성공하였고 결국 여성 노동을 제한하는 ‘10시간 법’이 통과되었다.⁷⁾

7) 물론 10시간 법은 여성의 노동일뿐만 아니라 남성의 노동일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1870년대쯤이면 이미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대부분 투쟁을 통해 9시간 노동을 쟁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법이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본 내용은 노동자들이 보호입법 요구를 내건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요구안이 변화해 온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을 제한하는 보호입법을 요구안으로 내건 이유는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 여성을 일터에서 몰아내 가정으로 유폐하려는 데 대해 자본가와 남성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가 아니었다. 당시 노동계급은 여남 노동자 모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다음 세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간이라도 단축하여 한 명이라도 가사노동 및 양육을 제대로 담당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것이다. 하필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집에 남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임신, 출산, 수유는 남편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여성이 이미 자본가의 입장에서 열등한 노동력으로 고착화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가족임금 요구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역사학자 제인 험프리즈는 「계급투쟁과 노동자계급 가족의 지속」이라는 글에서, 당시 노동자들이 가족임금을 요구한 것은 가족 단위 총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당대에는 자본가가 가족이 생존 가능한 수준에 맞춰 임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의 수에 비례해 임금이 증대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명만 임금노동을 하고 나머지는 가사노동을 해서 가족임금을 받는 것이 노동자계급 가족의 생존에 더욱 유리했다.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관점인 것이다.

요컨대 가족임금과 보호입법 요구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생물학적 인간 재생산의 필요가 충돌하는 상황 및 당시의 계급 역관계에서 노동자계급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 선택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에 대해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 '남성 노동자들이 남성으로서의 이해관계 또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본가들과 손을 잡고 여성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배제, 가정으로 유폐한 것이며 이것이 계급을 초월한 남성연대의 사례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여성 직종'과 '남성 직종'의 구별이 확립된 이유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은 자본주의 생산 하에서 열등한 노동력으로 고착되었고, 그로 인해 남성보다 협상력이 약한 경향이 있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젊은 비혼

여성들의 경우 결혼 전까지만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하거나 숙련직으로 올라가려는 동기,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 않았다. 부양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부이거나 남편의 수입이 불안정했다. 이들은 더 좋은 직업을 찾아 거주지를 옮겨 다니기도 어려운 상태였기에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 때문에 투쟁을 위해 조직 화될 시간과 에너지도 부족했다.

즉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 사이의 구별이 확립된 것은 단지 성차별적 이데올로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 협상력이 약한 노동력을 특히 필요로 할 때 여성 노동력이 그 필요를 충족시켰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840년에 교사의 60%가 남성이었지만, 20년 후에는 남성 비율이 14%로 줄어들었다. 핵심적인 이유는 여성의 임금이 더 저렴했기 때문이었다.⁸⁾ 또한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 사이에 경제는 호황기였고, 자동차, 항공기, 전자제품, 식품 가공 등의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공장들은 기존의 공업지대가 아닌 새로운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이런 지역에서는 대부분 노동자가 부족했고, 이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새로운 산업 부문의 자본가들은 비싼 숙련 노동력보다는 저렴한 반숙련 노동력을 더 필요로 했기에 이들은 여성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였다.⁹⁾

(4) 소결

여성억압과 계급억압 모두 생산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원인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출현했고, 오늘날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성별 임금격차, 성별 직종분리 역시 자본가나 남성 노동자의 성차별적 인식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성맹적(gender-blind) 특성 자체가 더 주요한 원인을 확인했다. 이렇게 여성억압의 근본

8) 반면 뉴잉글랜드 방직산업은 ‘여성의 일’이었지만, 1830-1840년대에 여성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투쟁하기 시작하자 고용주는 그들을 아일랜드인 남성과 소년들로 대체했다. 아일랜드인 남성과 소년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으로 일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9) 린지 저먼, 『여성과 마르크스주의』

원인을 탐색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페미니즘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어 온, 물질적 생산이라는 문제가 여성억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의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더 다룰 것이다.

나. 여성억압과 다른 억압과의 관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여성억압과 다른 억압의 관계는 현재 한국 여성해방운동 내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제까지의 논쟁 구도는 (다소 극단적인) 정체성 정치 대 상호교차성 사이에서 형성되어 왔다.

(1)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정체성 정치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여성 인권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여성들이 다른 피억압 집단과도 연대해서 싸워야 한다거나 여성이 아닌 사람들도 여성해방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또 하나의 여성억압으로 보고 강력하게 거부한다. 현재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 주최측인 ‘불편한 용기’가 참가자를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하고, 다른 운동단체들과 선을 긋는 것도 그런 사례이다. 이런 경향은 다소 극단적인 형태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 정치의 한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미국 소수자 운동에서는 정체성 정치가 주류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체성 정치가 투쟁을 파편화시킬 뿐 아니라 극우파도 활용할 수 있는 체제순응적 운동으로 귀결되었고, 계급 문제를 생략하고 은폐하였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의 요구사항 중에는 여성 경찰청장 임명, 판검사 등 고위 관직 여성 임명이 있다. 또한 7월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편한 용기’ 측에서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고, 정부 요청에 따라 논의를 당분간 상호 비공개하는 데까지 합의했다(뉴스1, 「광화문 진출 앞둔 ‘불편한 용기’, 정부 대책수립 참여한다», 2018. 7. 17.). 구호는 과격할지라도, 조건이 만들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유주의 정권과 공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온건한 세력인 것이다.

결국 정체성 정치는 소수 엘리트 여성의 체제 편입을 용이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다수 여성이 진정 해방되는 사회를 만들지는 못한다. 그렇기에 지금 득세하는 듯한 ‘여성 우선’의 정체성 정치는 사실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당장은 속 시원할지는 몰라도, 정작 다수의 평범한 여성들이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는 이유인, 뿌리 깊은 여성 억압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여러 억압의 기계적 결합에 머무른 상호교차성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인식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담론에 주목하고 있다. 상호교차성은 여성이라 해서 무조건 같은 억압을 겪는 게 아니며, 여성억압, 인종적 억압, 계급적 억압 등 여러 억압의 ‘교차점’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교차성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1970년대 ‘콤바히 강 공동체(Combahee River Collective)’나 ‘빵과 장미(Bread and Roses)’ 같은 단체들은 진정으로 모든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인종적 억압, 계급적 억압도 문제 삼아야 하고, 자본주의, 제국주의와도 싸워야 한다고 선언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상호교차성의 선구자들”이라고 거론되는 두 단체의 실천을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게 모든 억압에 맞서 힘 있는 실천을 하지는 못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계급 억압에 대한 간과 또는 몰이해였다. 당시 활동했던 페미니스트들의 회고에 따르면, 중간계급 출신 여성들이 행동을 고치고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으로 계급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고방식 등이 있었고 이는 회원들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초래했다. 상황은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상호교차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페미니스트 린다 고든조차도 “상호교차성의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한 가지 특정한 문제는 계급적 불평등에 대한 간과”라고 말한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버니 샌더스의 문제제기를 회피하기 위해 상호교차성 담론을 이용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별첨 3] 참고)

상호교차성이 실천에서 이런 한계를 드러내는 이유는, 상호교차성이 여러 억압들을 하나의 총체적, 통일적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억압, 인종적 억압, 계급 억압 등이 골고루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그치면 각 억압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들을 기계적으로만 결합시키게 된다. 그러면 각 억압의 고유한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결국 그 어떤 억압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여성억압과 다른 억압 간 관계에 대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관점

여러 억압을 하나의 총체적, 통일적 이론으로 설명하려면 먼저 각 억압의 근본 원인을 질문해야 한다. (이는 정체성 정치와 상호교차성 모두 하지 않는 질문이다.) 앞서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

여성억압이 발생한 과정을 추적해보면 그 근본 원인은 생산이 발전하여 초기농업에서 중농업으로 이행함으로써 성별 노동분업의 성격이 억압적으로 변화한 데 있었고, 계급억압 역시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생산의 발전)로 잉여생산물, 사적 소유가 출현하면서 발생했다. ‘여성억압은 계급억압에서 파생됐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억압을 부차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두 억압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변화라는 틀에 있었다. 또한 지금 수많은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라 할 수 있는, 성별 임금격차 및 성별 직종분리, 여성의 가사와 양육 전담 압박도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의 특성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었다.

즉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그들이 무엇인가는 그들의 생산에, 그들이 무엇을 생산하는가에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일치한다.”는 맑스의 말이 일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기에 여성억압의 문제는 생산력의 발전과 이에 따른 생산관계의 발전 속에서 계급 억압을 포함한 다른 억압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2. 가. (1)’에서 살펴보았듯이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억압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페미니즘이라는 틀로는 바로 이 점이 인식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 억압의 고유성을 인지하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 발전이라는 총체적 틀 속에서 여러 억압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억압들 간 관계에 대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입장이다.

여성해방이라는 목표를 그저 윤리적 당위가 아닌 현실적 토대 위에 올려놓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여성억압이 출현하던

사회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별 노동분업을 비교해 보자. 초기농업에서 중 농업으로 이행하던 시대의 생산력 수준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균적 근력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웠고 이는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서 부차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다. 여성과 남성의 평균적 근력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자본주의가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함에 따라 근력을 사용하는 생산방식은 대부분 기계장치 등에 의한 생산방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남성은 할 수 있고 여성은 못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떠올리기조차 쉽지 않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여성들이 사회적 생산에 대거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물론 자본가가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착취하기 위해서이기에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여성해방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성별 노동분업을 폐지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단순히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성별 노동분업은 옳지 않다’뿐만 아니라 ‘성별 노동분업의 물질적 토대와 근거 자체가 생산력 발전과 함께 점점 없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변화를 더 철저하게 밀어붙이자’고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 발전이라는 총체적 틀 속에서 여성억압을 포함한 여러 억압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강점은 여기에도 있다.

3.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과제는 무엇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여성억압이 누적되어 왔고, 민중이 촛불투쟁 이후 한층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됨에 따라, 여성해방운동은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람들이 여성해방운동으로 대거 유입되어 그 주체로 형성될 가능성이 계속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여성해방운동에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여성 인권 우선’이라는 식의 정체성 정치에 이끌리고 있으나, 정체성 정치의 접근법은 그들이 애초에 거리로 나온 이유였던 여성억압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이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여성억압이 근본적으로 일소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발제문은 그 방법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제시하였다.

가.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사회주의 운동은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 일체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므로, 낙태죄 폐지 문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문제, 일상 속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등 여성이 사회에서 받는 억압을 없애고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원칙적, 당위적인 차원이 아니다. 지금은 여성해방운동이 확대 강화되며 그 전에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여성해방운동으로 대거 유입되고 운동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속에서 민중이 급진화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사회주의, 진보세력 스스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확실히 정립하고 체화하여 주체를 재정비한다.

오늘날 사회주의, 진보세력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페미니즘’과 ‘여성해방’을 같은 뜻으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발제문에서는 두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해방운동에서는 페미니즘 운동이 거의 전부를 점하고 있지만, 사실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여러 사상들 중 하나이다. 물론 페미니즘 내에도 다양하고 이질적인 조류들이 존재하지만, “2.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설명하는 여성억압” 부분에 나오는 설명과 분석들, 특히 여성억압과 다른 억압들의 관계를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하나의 총체적 틀 속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든, 급진주의 페미니즘이든,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든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이다. 즉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사상이라는 점에서는 페미니즘과 공통점이 있지만, 여성해방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길을 제시하는, 독자적인 사상이다.

이제까지 발제문에서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어떤 점에서 페미니즘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주의, 진보세력 스스로도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정립, 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문제에서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성 문제에서는 사회주의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는 태도, 여성 문제에서 페미니즘에 기대지 않으면 어딘가 불안해하는 태도가 만연하다. 페미니즘 책모임, 페미니즘 세미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정작 사회주의로 여성억압을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그런 방향의 학습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사회주의' 세력의 현실이다.

지금 오히려 여성해방운동은 새로운 주체들이 유입되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기존의 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정세에 대처하려면 사회주의, 진보세력도 소극적, 보수적 태도를 극복하고 학습을 통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확실히 정립, 체화해야 한다. 즉 주체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다. 대중에게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알려내서,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한다.

지금은 페미니즘과 구별되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존재조차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수차례 강조했다듯이 여성해방운동의 확대, 강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운동 속으로 유입될 것이다.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을, 여성억압과 다른 억압과의 관계를 궁금해 할 이들에게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알려낼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다면 이들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새로운 주체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별첨 1] ‘가부장제’ 이론 훑어보기

글쓴이: 혜진 - 2017년 10월 18일

<http://socialist.kr/partriarchy-its-rise-and-limits/>

여성억압 일반을 의미하는 용어, ‘가부장제’

현재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별, 성폭력 등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 억압적 구조를 ‘가부장제’라고 일컫는다. 예를 들어 9월 6일 여성주의저널 『일다(ild a)』에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부터 최근에 있었던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온라인상의 헐박, 언어폭력 사건 등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고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말하는 글이 「가부장제는 해체되고 있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또한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에서 발간한 『페미니즘의 개념들』은 ‘가부장제’를 “개별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를 지지하고 구조화하는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부장제’는 성에 근거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 그 자체를 지칭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가부장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핵심개념으로 등장하다

지난 9월 6일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케이트 밀렛이 82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1970년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판한 『성 정치학』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급진 페미니즘의 고전이 되었는데, ‘가부장제’를 페미니즘의 중심 용어로 끌어올린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가부장제’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가부장제’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성차별적 구조 그 자체를 일컫는 것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막스 베버는 “아버지가 확대된 친족 연결망의 여타 성원들을 지배하고 가구의 경제생산을 통제하는, 가구조직의 특별한 형태”라는 의미로 가부장제

개념을 사용하였다. 맑스는 가부장제를 ‘가족을 이끄는 남성이 생산을 지휘 통제하는 특정한 생산방식’으로 보며,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농민가구가 해체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린다 변햄, 미리암 루이의 「불가능한 결혼」(『여성해방이론의 쟁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류학적 맥락에서의 가부장제는 “남성 혈통을 따르는 확대된 친족구조에 대한 서술적 용어로서, 하나의 생산단위(때로는 노예노동을 포함한)로서 기능하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소유하고, 사회관계(특히 결혼)와 노동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가부장의 권위를 따르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가족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1960년대 급진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가부장제’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고 페미니즘의 중심 용어가 된다. 케이트 밀렛은 파이어스톤과 더불어 급진 페미니즘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고, 급진 페미니즘 사상이 확산되면서 ‘가부장제’는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됐다. 베로니카 비치의 글 「가부장제에 대하여」(1979)은 이러한 ‘가부장제’ 용어의 역사와 한계를 잘 정리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언제나 어떤 사회에서든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고 종속시켜 왔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가부장제 개념을 지금과 같은 의미로 처음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최근에 작고한 케이트 밀렛은 『성 정치학』에서 “가부장제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이 적은 남성을 지배한다’는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조직된 사회”이며 “가부장제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는 아이들로 하여금 성별에 따라 역할, 성품,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사회화하고 여성을 종속 상태에 묶어두기 위해 기능하는 가족”이라고 분석하며 현재 널리 쓰이는 가부장제의 의미를 정례화하였다.

그러나 밀렛의 분석에는 가부장제가 대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다른 급진 페미니스트들 또한 ‘무엇이 남성을 성적 억압자로 만드는지’, ‘특정한 사회형태의 어떤 특성들이 남성을 여성에 비해 권력을 가진 위치에 놓는지’, ‘가부장적 사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사회에서 지속되는지’, ‘그 근본 토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래도 밀렛은 과거 보수세력과 반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종속을 생물학적 차이로 정당화한 것에 반대했기에, 가부장제의 기원 내지 근본 토대를 양성 간 생물학적 차이에서 찾지는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급진주의 페미니스트인 슬라미스 파이어스

톤은 『성의 변증법』에서 위의 질문에 대해 ‘여남간 생물학적 차이’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여성 억압의 토대가 남성에 의해 통제되는 여성의 재생산 능력, 즉 여성의 임신 출산 가능성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 또한 한계에 부딪힌다. 사회의 생산양식 형태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형태들은 제각각이고, 해당 사회에서 성차가 야기하는 결과 또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석은 이 점을 간과했기에 사회의 생산양식 변화에 따라 남성지배/여성종속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설명하지 못했고, 남성지배/여성종속의 원인이 ‘시간을 초월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욕’에 있는 것처럼 제시했다. ‘여성억압은 본디 존재하는 것’이라는 정해진 결론만 있을 뿐, 여성억압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설명은 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맑스주의/사회주의를 페미니즘과 결합시키려고 했던 일군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맑스주의가 여성의 종속을 설명하지 못하고 부차화한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부장제’ 용어를 도입하고자 했다. 즉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계급투쟁은 맑스주의로 설명되고, 가족 내에서의 가사노동, 양육 등 재생산관계와 이와 관련된 여성억압은 ‘가부장제’로 설명된다는 이원론적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허나 이렇게 이 둘을 서로 분리된 독자적인 것으로 분석하다 보니,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자율적인 영역이 되고, 각자는 고유한 착취와 사회계급의 체계를 갖는다”는 식의 이론적 입장에 다다랐다. 그 결과 생산관계와 가족관계가 관계 맺는 방식, 사회적 생산관계가 가족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관계를 변형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38년 전에 쓰인 베로니카 비치의 글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급진 페미니즘의 부상과 함께 ‘가부장제’ 용어가 널리 확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지어 페미니즘 내에서조차 여성억압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부장제’ 용어가 지닌 한계가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치는 “그 개념이 폐기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을 개념화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적 분석을 발전시키기 전까지, 페미니스트 정치와 이론에서 가부장제 개념이 유용한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부장제 이론의 가장 큰 한계: 여성억압에 대한 초역사적 접근

‘가부장제’라는 용어가 지닌 가장 큰 한계는 여성억압에 대해 초역사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린다 번햄, 미리암 루이의 「불가능한 결혼」에 따르면 가부장제 이론은 가부장제를 “모든 사회와 생산양식 속에서 존재해 온 것”으로, “계급을 초월하여 남성들 간의 연대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그것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여긴다.

앞에서도 짚었듯이, 남성지배/여성종속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항상 존재해왔던 것’으로 전제하게 되면, 역사적, 사회적 산물로서의 여성억압을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한다. 이는 여성억압의 원인 분석을 요원하게 하고, 결국 ‘여성억압이 있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있고 가부장제는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여성억압이 있다’는 식의, 여성억압의 현상 기술을 다시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혹은 역사적, 과학적 분석과는 떨어진 채 초역사적인 남성의 지배 본능을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지적하게 되기도 한다. 이는 인류학적 연구 결과들과도 배치된다. 역사적으로 여남이 평등했던 인류 사회가 존재했음이 확실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계급, 인종 등 다른 사회적 관계와 남성지배/여성종속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과 남성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는 간과되고, 여성과 남성은 각각 동질적 이해를 갖고 있다는 명제가 가부장제 이론의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 사실상 ‘남성의 지배적 본능’을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화해불가능한 근본적인 대립으로 보는 ‘가부장제’ 이론의 접근은 ‘피지배계급의 단결’보다는 ‘범계급적 여성단결’을 더 내세우는 데 이르기기도 한다.

‘가부장제’ 이론의 유용성,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

경력단절, 임금격차,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살해 위협, 일상적인 성희롱,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겪는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폭력의 위협과 차별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여성차별과 억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 ‘가부장제’를 손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부장제’라는 용어는 급진 페미니즘의 등장 이후 여성억압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역사적, 사회적 관계인 여성억압을 초역사적인, 독자적인

구조로서 접근하는 한계를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은 여성억압을 극복하고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억압을 역사적, 사회적 산물로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사회적 관계는 본래 있었던 것이거나, 본성 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관계들과 함께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억압 또한 다른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생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해왔다.

최근 터키의 9,000년 전 초기 농경사회 유적은 그 사회가 여남이 평등한 사회였음을 보여준다는 연구가 언론에 보도됐다. 남성지배/여성종속이 남성의 권력욕, 본능 등에 입각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회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성억압을 역사적, 사회적 산물로 본다면, 여남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특정한 지배, 종속 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남이 서로 평등했던 사회가 인류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평등이 파괴되고 남성지배/여성종속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농경의 등장과 같은 생산의 변화에서 찾고, 그 후 장기간 지속된 여성종속이 자본주의에 와서는 어떻게 자본주의적 생산, 계급관계와 결합했는지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여남의 관계를 근본적인 대립으로 보고 범계급적 여성단결을 주장하는 시각과는 사뭇 다른 이론적, 실천적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가부장제’라는 용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부장제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부장제’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적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

[별첨 2] 가족임금, 남성 자본가와 남성 노동자는 정말 공모했는가?

글쓴이: 이지완 - 2017년 12월 11일

<http://socialist.kr/rights-and-wrongs-of-the-male-breadwinner-model/>

올 한 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은 바로 『82년생 김지영』이다. “나도 김지영이다”라는 선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이 책은, 아이를 가진 이후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하게 된 주인공 김지영의 삶을 그려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출간된 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매우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책은 여성들이 체감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차별 중 하나가 가사 및 양육의 전담, 경력단절 및 임금 차별임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82년생 남성과 여성을 비교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2016년 기준),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31.7% 낮으며,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에 비해 불안정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12.4% 높고 임금은 월평균 67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남성 자본가와 남성 노동자의 공모’로 설명되는 페미니즘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물론 성별 임금격차, 성별 직종분리 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 사회를 포함해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곳에서는 대체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웠는데, 그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19세기 산업화 시기 영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가족임금과 보호입법, 숙련노조에서의 여성배제로 여성의 임노동 참여가 제한되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확립되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본가와 남성 노동자가 공모함으로써 현실화됐다. 이로써 자본

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여성에게 저임금을 지급할 빌미를 얻었고,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남성들을 보조하고 남성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임금 지출 감소 효과를 맞보았다는 것이다. 한편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들을 가정 내로 유폐함으로써 남성의 가정 내 우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한 대표적 학자로 미셸 바렛이 있다. 그녀는 전자본주의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여전히 포섭되어 있었던 남성 노동자들과 노동자계급의 분열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부르주아의 이해관계가 단기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임노동과 관련된 성차별적 구조('성-분절 노동시장')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전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비롯되어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남성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배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셸 바렛을 비롯한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의 이런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많은 이들이 이런 설명을 듣고 '역시 계급을 초월한 남성들의 연대가 존재해 왔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외국 여성사학계, 노동사학계 일각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런 설명에 대해 비판해왔다. 1977년에 제인 험프리스(Jane Humphries)가 「계급투쟁과 노동자계급 가족의 지속」이란 논문에서 내놓은 가족임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1984년에 조안나 브레너(Joanna Brenner)와 마리아 라마스(Maria Ramas)가 「여성억압의 재고찰」에서 바렛에 대해 제기한 비판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글들은 공히 '남성 자본가와 남성 노동자의 공모'라는 설명에 내재된 한계를 비판한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쟁점 1. 보호입법이 여성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쫓아냈다?

바렛을 위시한 페미니스트들은 1840~60년대에 영국, 미국에서 만들어진 보호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저임금 부문에 종사하는 성별 직종분리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보호입법은 그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지 못했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사뭇 다른 결과를 낳았다.

브레너와 라마스의 글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호입법이 통과된 주의 수는 적고 그

마저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1847년에 방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Ten Hours Bill)이, 1867년에는 이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는 법이 통과됨으로써 보호입법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방직업에는 이미 성별 노동분업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성노동 시간 규제는 여성 노동의 축출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 노동시간 감소에 상응하여 남성 노동일도 감소되었다.

여성 노동일의 제한 요구는 1830년대에 아동 노동일 축소 운동이 좌초되자 그 대안으로서 채택된 요구로, 남녀를 불문한 전 노동자의 노동일 축소를 위한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구호였다. 부르주아는 성인 남성 노동자의 노동 시간 단축에는 극렬히 반대했으나 여성과 아동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에 보호입법이 방직업에서 전 산업분야로 확장되었을 때, 남성노동자들은 이미 법에 규정된 여성노동자들의 최고 노동시간(10시간)에 비해 짧게 일하고 있었으며 보호법은 자연스레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쟁점 2. 숙련 노동조합의 여성 배제 정책, 어떻게 봐야 하나?

한편 남성 노동자들이 숙련 노동조합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배제했다는 주장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빈번히 제기된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숙련 노조에게 당장 급한 것은 '남성으로서의 권위 회복'이 아니라 '숙련공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19세기 초, 자본가들은 정상 이하의 조건(저임금·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가내노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도처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남성 숙련 노동자들을 값싼 여성 노동자들로 대체하려 하였다. 이는 기계화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있던 숙련직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을 배가시켰다.

이에 숙련 노조 중 하나인 런던 재단사 직인 노조는 파업을 일으켰으나 결국 패배하였고, 그 결과 노조가 파괴되고 방직업에서의 노동조건이 후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숙련 노조는 '남성'의 영역에 '여성'이 침범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기보다는, '숙련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생산부문에 '미숙련 상태'의 여성 노동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물론 숙련 노조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숙련 노조가 취한 여성배제 정책의 핵심 동력이 젠더 이데올로기나, 여성을 열등한 상태에 두려는 남성의 욕구는 분명 아니었다. 이는 1830년대 영국의 런던 제본공조합, 글래스고우 물방적공과 같은 노동조합이 여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노조는 미숙련 업무를 맡는 여성 노동자들이 숙련공인 남성노동자와 경쟁적 위치에 놓이지 않는 한 여성 노동자들을 도왔다.

이렇듯 숙련 노조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남성 노동자와 자본가가 결탁하여 여성 노동자를 소외시킨 역사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더욱 싼 값의 노동력을 찾기 위해 배회하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벌어진 대립의 역사를 보여준다. 숙련직에서 여성을 배제하려 한 것이 여성들을 하급 일자리로 몰아넣은 게 아니라, 여성들이 이미 하급의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쟁점 3. 아내의 가사노동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줄여 자본가에게 이득을 준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자본가와 남성노동자가 타협한 산물이라는 견해는 뒤바뀐 인과관계와 몇몇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가 정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 노동자만 가족임금을 받으며 임금노동을 하고 그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할 경우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가 또한 이득을 본다’는 가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가설을 전제로 산업화 시기였던 19세기와 복지국가가 성립된 시기인 20세기를 거쳐 가족임금이 도입·확산된 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설 역시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가사노동과 노동력 가치 사이의 관계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아내가 존재할 경우 남편의 노동력 가치가 하락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요리, 빨래, 청소 등의 서비스가 싼값에 제공되는 사회라면 가정주부인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것보다 서비스를 구매할 때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이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가사노동으로 인해 경감되는 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가사노동의 전담이 사회의 형태와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

에 아내의 가정주부화가 늘 자본가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족도 생산력의 발전 정도나 사회의 제반 조건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항상 하나로만 정의 내리기 어렵다. 앞서 거론한 경제사학자인 제인 험프리스는 몰역사적, 몰계급적으로 가족의 억압적 기능만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 하면서, 19세기 영국의 노동자계급이 물리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을 꼭 필요로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 가족은 복지제도가 전혀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노동자계급 구성원을 부양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험프리스는 19세기 노동자계급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가족을 유지하고 총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임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당대에는 자본가가 가족이 생존 가능한 수준에 맞춰 임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비례해 임금이 증대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명만 임금노동을 하고 나머지는 가사노동을 해서 가족임금을 받는 것이 노동자계급 가족의 생존에 더욱 유리했다는 것이다. 맑스도 『자본론』 I권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중 “자본에 의한 추가노동력의 취득. 여성과 아동의 고용” 부분에서 가족구성원 중 1명이 가족을 부양할 때보다 가족구성원 모두가 고용되어 임금노동을 할 때 잉여가치율이 높아지고 착취의 정도가 증대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볼 때 당시 노동자들에게 가족임금이 착취의 정도를 줄이는 대응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는 험프리스의 견해는,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임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견해에 비해 설득력을 지닌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확립된 이유

이렇듯,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확립되기까지 이어진 노동자계급의 실천(보호입법, 숙련노조에서의 여성배제 등)은 임노동과 관련된 성차별적 구조가 만들어진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여성노동이 이렇게 부차화된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맑스주의는 생물학적 특성만을 강조하거나 혹은 이데올로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모두 극복하고, 유물론적 관점에 따라 자연적 존재로서의 여성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모두 고찰함으로써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물론 임신, 출산 등이 가능한 생물학적 특성이 사회적 성별을 결정한다고 할 수 없으나, 여성역압의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길러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억압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 계급 발생 이전 원시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이 억압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여성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성별 분업이 억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는 계급 사회의 도래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계급 사회에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은 여성역압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계급 사회라 할지라도, 직접생산자가 스스로의 생산과정을 통제할 수 있었던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소한 여성들이 임신, 월경 여부에 따라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생산 참여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일반화된 이후 직접생산자가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면서 여성들도 이러한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과정을 기계의 리듬에 맞춰 통제하는 자본가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회복 중인 여성노동자의 조건에 맞춰 생산 속도를 조절해줄 리가 없었고, 출산휴가나 탁아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굳이 추가적 비용의 지출을 자처할 이유도 없었다. 자본 간 경쟁이 개별 자본가의 존립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어려웠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임신 중에도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야 했고 출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이를 낳아도 수유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신 및 출산 가능성이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강한 충돌을 이루었다. 또한 산업화 초기 아동노동이 가족수입의 주요한 원천 중 하나로 작용하고, 노동자계급은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식의 부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생존 전략이었다. 남편과 아내 중 누군가는 가사와 양육을 수행해야 했고, 이 필요성과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충돌했기에 임신과 출산을 직접 하는 당사자인 여성이 집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가능

성을 전제로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노동력으로 고착화되었다. 이와 같은 성별 직종분리를 전제로 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가족구성은 19세기 노동자계급에게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강요된 선택이었다.

“김지영”들의 고된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이렇듯, 지금과 같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확립된 것은 ‘남성 자본가와 남성 노동자의 공모’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여성이 이미 자본가의 입장에서 남성보다 열등한 노동력으로 고착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대응의 결과였다. 만약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되고 생산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서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과정을 통제한다면,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 인간 재생산의 필요와 생산 참여를 양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구가 실현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은 더 이상 억압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확립에 있어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거나 자본가와 노동자가 남성으로서의 이해관계를 갖고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관점을 지양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결국 남성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속아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배반하고 남성 자본가들과 한 편이 되었다거나, 여성과 남성은 같은 노동자일지라도 단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그런 비관적인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와 고된 가사 노동에 지친 삶을 사는, 이 땅의 무수히 많은 ‘김지영’들에게 본래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평등과 해방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함께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여성억압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만들어가야 한다.



[별첨 3] 상호교차성: 여러 억압의 기계적 결합에 머무르다

글쓴이: 김민재 - 2018년 1월 8일

<http://socialist.kr/intersectionality-combining-oppressions-mechanically/>

요즘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는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에 언니네트워킹에서 발행한 퀴어페미니스트 매거진 『뽕』 2017년 특별판에는 상호교차성 개념을 설명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이 여러 편 실렸다. 미국에서는 이미 상호교차성 개념이 주류화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트위터나 연설에서 '상호교차적' '상호교차하는 쟁점들'이라는 말을 썼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를 비판하고 계급적 불평등을 폭로하는 샌더스를 경제 문제에만 집중하는 편협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전술이었다고 한다.

상호교차성은 1989년 킴벌리 크렌쇼라는 흑인 페미니스트 법학자가 법적인 차별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처음 쓴 개념이다. 여성이라 해서 무조건 같은 억압을 겪는 게 아니며, 여성억압, 인종적 억압, 계급적 억압 등 여러 억압의 '교차점'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제껏 미국의 기존 페미니즘 운동이나 성소수자 운동에선 여성, 성소수자 등이 각자 자기 정체성에 근거해서 자기가 받는 억압에 맞서 싸우면 된다는 '정체성 정치'가 주류였다. 상호교차성 개념은 이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호교차성 개념은 여러 억압들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킬 뿐 억압을 인식하는 총체적 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글은 상호교차성 개념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이 개념이 갖는 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상호교차성이 등장하기까지

상호교차성이 페미니즘의 최신 인기어가 되었지만, 이 말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

지 자세히 알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상호교차성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상호교차성이라는 말 자체는 앞서 언급했듯이 1989년에 김벌리 크렌쇼가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그 연원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 상호교차성의 근본적 내용은 1977년 '컴바히 강 공동체(Combahee River Collective)'의 「흑인 페미니스트 선언문」에 이미 담겨 있었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의 중론이다. 1960-70년대 미국 내 신좌파(New Left) 운동에서 흑인 여성들의 위치는 복잡했다. 그들은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블랙 파워(Black Power)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흑인 민족주의 운동에서도 주변화되어 있었다. '컴바히 강 공동체'의 결성과 흑인 페미니즘의 등장은 바로 흑인 여성들의 이런 처지에서 비롯된 고민의 결과였다.

① 제2물결 페미니즘에서 배제된 흑인여성

1960년-70년대 미국에서 민권운동, 반전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사회주의 운동이나 급진 운동의 전통이 끊긴 상황에서 새롭게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이때의 운동을 '신좌파'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학생 비폭력 조정 위원회'(SNCC)등 대규모 신좌파 조직들은 인종적 평등, 전쟁 반대 등 진보적 이념을 말하면서도 정작 여성억압 문제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여성 활동가들은 조직 내 성차별, 성폭력에 대해 비판했지만 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1967년 '신정치 전국회의'(NCNP)를 계기로 그런 기존의 조직들과 단절한 후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에 나섰고, 그것이 급진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이었다.

그런데 급진 페미니즘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개 백인이었다. 물론 흑인 여성들도 기존 조직 내에서 성차별, 성폭력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백인 여성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급진 페미니즘은 '가부장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았던 반면, 흑인 여성들은 여성억압뿐 아니라 인종적 억압, 계급적 억압도 받고 있었기에 그것만이 근본적이라는 진단에 동의할 수 없었다. 또한 모든 남성이 억압자라는 관점도, 인종적 억압에 맞서 싸울 때는 흑인 남성들과 동지가 되어야 하는 흑인 여성들의 상황과 잘 맞지 않았다. 결국 흑인 여성들은 페미니즘 운동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② 흑인운동에서도 소외된 흑인여성

한편 1970년대가 되면서 ‘블랙 파워’(Black Power) 구호가 부상하며, 기존 민권운동보다 강경한 흑인 민족주의 운동, 분리주의 운동에 힘이 모아졌다. ‘흑표범당’(Black Panther’s Party)도 그런 운동을 표방한 정당 중 하나였다. 흑인이라는 정체성에 입각한 정치를 하고자 한 것이다. 백인 중심의 문화, 역사 서술 속에서 부끄러운 것, 열등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흑인의 문화, 경험, 정체성이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화, 경험, 정체성이 흑인 남성의 문화, 경험, 정체성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흑인 남성이 이제까지 인종차별 때문에 억눌려 왔던 남성성을 회복하는 것이 흑인의 해방이기 때문에, 흑인 여성은 남성의 기를 세워 줘야 한다’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흑인 남성성’을 강조하고 여성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흑인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주체로 서기 어려웠다.

③ 상호교차성의 선구자, ‘컴바히 강 공동체’의 결성

이런 상황에서, 흑인 민족주의 운동과도, 백인 중산층 여성 위주의 페미니즘과도 차별화되는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을 지향한 흑인 여성들이 보스턴에서 1974년 무렵부터 서로 교류하며 결성한 것이 바로 ‘컴바히 강 공동체’였다. 조직의 이름은 1863년 남북전쟁 기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컴바히 강에서 있었던 군사행동에서 따왔다. 해리엇 터먼이라는 흑인 여성이 지휘한 이 군사행동으로 700명의 노예가 해방되었다. ‘컴바히 강 공동체’가 발표한 「흑인 페미니스트 선언문」 중 다음 부분은 실제로 그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며, 상호교차성의 핵심을 담고 있다.

“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인종적 억압, 계급 억압, 성적 억압이 동시에 경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급 억압이나 성적 억압으로부터 인종적 억압을 분리해내는 것이 많은 경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저 인종적인 것만도 아니고 그저 성적인 것만도 아닌, 인종적-성적 억압 같은 것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가부장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정치적-경제적 체제의 분쇄가 필수적임을 인식한다.“고 선언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④ 또 다른 선구자, ‘빵과 장미’

그리고 그때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미국의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린다 고든이 2016년 상호교차성에 대해 쓴 글에 따르면, “제2물결 페미니즘 속 상호교차성의 선구자들” 중에는 백인 여성들도 있었다. ‘빵과 장미’(Bread and Roses)라는 단체가 바로 그런 사례였다.

‘빵과 장미’는 1969년 가을 보스턴에서 창립되었으며 주로 20대 고학력 백인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린다 고든 자신도 이곳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오늘날의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들처럼, 이들은 선불리 ‘자매애’를 말하기 전에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종적, 계급적 차이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성찰했다. 예를 들어 이 단체의 지도적인 인물이었던 메레디스 텍스(Meredith Tax)는 “우리는 우리 중 대부분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객관적 위치가 ‘복지맘(welfare mothers)’들과, 우리 백인 어머니들의 흑인 가정부들과, 제3세계 여성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는 자매애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주의 사회는 모든 형태의 착취, 인종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남성 우위가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가령 이들은 흑표범당 활동가들이 국가의 탄압에 시달릴 때 연대 투쟁에 힘썼다.

한계: 억압들에 대한 기계적 병렬과 다원론

상호교차성에 따르면, 흑인이자 여성이자 노동자인 사람처럼 억압의 ‘교차점’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흑인이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데 여성만 해방된다거나, 여성이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데 노동자만 해방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호교차성

이론은 여성이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모든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인종적 억압, 계급적 억압도 문제 삼아야 하고, 자본주의, 제국주의와도 싸워야 한다고 선언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는 분명 기존 페미니즘 이론에 비해 진일보한 인식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샤론 스미스와 같은 미국의 맑스주의자는 상호교차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호교차성이 억압의 근본적 원인을 도외시하고 여러 억압을 단순 병렬하는 듯 보이는 것은 상호교차성 자체의 한계가 아닌 상호교차성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해석의 한계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킴바히 강 공동체’ 등의 흑인 페미니즘이 이야기한 상호교차성은 사회주의와 연결될 수 있을 만큼 반자본주의적이고 급진적이지 않았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상호교차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교차성의 선구자들”이라고 거론되는 두 단체의 실제 실천을 살펴보면, 그 당시부터 이미 상호교차성의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킴바히 강 공동체’나 ‘빵과 장미’ 활동가들은 진실로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특히 계급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본주의와 맞서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억압들을 나열, 병렬했을 뿐 이 억압들을 하나의 총체적, 통일적 이론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사실 여러 억압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접근은 상호교차성 개념이 인기를 끌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흐름이었다. 가령 젊은 시절 ‘빵과 장미’에서 활동했던 린다 고든도 상호교차성 개념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그게 두 세기에 걸친 사회주의 페미니즘(socialist feminism)의 핵심 전제, 즉 지배의 여러 개의 형태들이 상호작용하고 융합된다는 것과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역시, 여성 문제와 계급 문제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두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억압과 계급억압을 결합시키기 위해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한 ‘가부장제’ 범주를 받아들여 자본주의와 나란히 병렬시켰다. 자본주의가 생산양식이라면 ‘가부장제’는 ‘재생산’ 양식이고, 전자가 계급억압의 장소라면 후자는 여성억압의 장소이므로, 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사회주의 혁명과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혁명이 둘 다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이것은 두 개의 독립된 서로 다른 억압 구조를 이론화했기 때문에 ‘이원론’이라고 불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원론은 그 한계를 드러냈다. 여성억압과 계급억압이 완전히 독립되어 따로 존재한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여성억압과 계급억압을 결합시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합은 기계적 결합에 머물렀고 이론과 실천이 전개되어갈수록 양자가 서로 분리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상호교차성 페미니즘 역시 이런 이원론의 한계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답습했다. 이를테면 「페미니즘 이론 내 상호교차성의 개념」(Anna Carastathis, 2014)이라는 논문은 이론적 틀로서 상호교차성이 가진 분석적 이점으로 환원불가능성(irreducibility)을 내세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억압이라는 현상을 하나의 근본적인 설명적 범주(예를 들어, 계급)로 환원하고 그 범주를 존재론적으로 특권화하는 대신, 상호교차성 이론가들은 억압이 복수의, 탈중심화된, 그리고 함께 구성하는 축들을 통해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통적인 맑스주의적 접근들, 예를 들어 계급이 젠더와 인종에 대해 인과적이고 설명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젠더와 인종은 부수적 현상으로 보는 접근들을 반박하는 것이다. ... 상호교차성은 (특히) 몇몇 맑스주의자들이 ‘계급’이나 ‘경제적 토대’에 부여하는 인과적이고 설명적인 우선순위를 반박하는 인식론적 가치이다. 상호교차성의 ‘특징(hallmark)’은 ... ‘모든 억압에 대해 다루는 것의 필수성’이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상호교차성이 여러 억압의 기계적 결합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심지어 위 논문에 따르면, 이런 기계적 결합은 이론의 ‘한계’가 아닌 ‘장점’이라는 것이다.

여러 억압에 대한 총체적, 통일적 설명을 꺼리며 ‘모든 억압이 다 중요하다’는 식의 인식에 머무르는 것은 단지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상호교차성을 표방하는 운동 단체들 역시 ‘이 억압도 중요하고, 저 억압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기계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 일례로 영국의 상호교차성 페미니즘 운동 단체인 ‘페미니즘의 반격

(Feminist Fightback)’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는 2007년-2008년 무렵부터 ‘사회주의 페미니즘’ 대신 ‘상호교차적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젠더와 계급에 대한 관심은 담고 있지만 인종은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계급도 중요하고 젠더도 중요하다’는 식이고, 여기에 인종, 장애, 성소수자 등 더 많은 억압들을 추가하여 나열하면 된다는 생각인 것이다.

기계적 결합이 아닌 총체적 이론이 필요한 이유


여러 억압을 병렬하고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이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부정확한 이론이어서뿐만 아니라 실천에서 그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실천적 한계는 계급에 대한 경시와 지배계급의 상호교차성 수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미국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를 서술한 위니프레드 브레인스(Winifred Breines)의 『우리 사이의 불화(The Trouble Between Us)』라는 책은 ‘빵과 장미’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주의적 정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활동가들에게, 계급은 인종이나 성적 지향만큼 중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간계급 출신 여성들이 행동을 고치고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으로 계급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고, 이는 힘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회원들의 죄책감만을 부추겼다. ‘کمبাহی 강 공동체’에서도 이론을 학습하는 것은 계급투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본인이 직접 노동자가 되거나 빈민 지역사회의 일환이 되는 것만 계급투쟁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회원들 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초래되었다. 상호교차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린다 고든조차도 “상호교차성의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한 가지 특정한 문제는 계급적 불평등에 대한 간과”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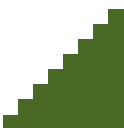
또한 “이 용어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그 어떤 고려와도 얼마나 멀어졌느냐 하면, 오늘날 ‘린 인(lean in)’ 페미니즘의 가장 기업적인 버전조차도 무리 없이 스스로

가 상호교차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린 인 페미니즘은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가 주창한 1%를 위한 친기업적 페미니즘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계급적 불평등에 대한 샌더스의 문제제기를 회피하기 위해 트위터나 연설에서 ‘상호교차적’ ‘상호교차하는 쟁점들’ 같은 용어를 썼던 것이 또 다른 대표 사례일 것이다.

결국 여러 억압이 골고루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상호교차성의 접근이 오히려 그 어떤 억압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부적절한 실천으로 이어졌다. 지금 우리가 여러 억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총체적 이론들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더 올바르고 효과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이론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맑스주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맑스주의는 경제적 착취의 종식만이 아닌 보편적 인간해방을 사회주의 운동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했고, 노동자계급은 자신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보편적 인간해방을 달성해야만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어떤 억압도 부차화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억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실천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맑스주의의 보편적 인간해방이라는 관점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토론문 ①



이 지 완

『사회주의자』 기자

최근 몇 년 간,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데이트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모아졌으며, 이에 SNS 상에서 ‘OO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2018년 초에 시작된 ‘Me too’ 운동은 정치·문화·예술계의 ‘대부’들의 추악한 면면을 속속들이 밝혀내어 ‘권력이 있는 곳에 성폭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올 여름,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폭염을 뚫고 거리로 나왔다. 5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4차례 열린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 (주최측 추산) 연인원 18만 7천여 명이 참여했다. 여성들은 그간 ‘몰카’와 불법촬영물 유통에 안이하게 대처해온 경찰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지난 7월 7일에는 광화문에서 낙태죄 폐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여성들의 분노가 태양빛보다 더 뜨겁게 아스팔트 위를 달구고 있다.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이 고양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억압이 다른 억압과 가지는 관계는 무엇인가?’,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주최측이 참가자를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하고,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인권과 난민의 인권을 대결구도에

놓는 발언을 하면서 위의 쟁점에 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현재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는 ‘여성억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억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궁을 가진 여성들만이 여성억압을 깨부술 이해관계를 가진다’와 같은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주장과 ‘현실 속에서 여성 억압,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 인종적 억압 등이 교차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다른 억압에 맞선 투쟁 또한 필요하다’라는 상호교차성 담론에 기반한 주장이 논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이다. 사회주의는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사상이지만,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위 두 쟁점에 대해 답하려는 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회주의자들 중 다수가 ‘맑스주의는 계급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사상이므로, 여성억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맑스주의의 결합은 페미니즘으로 메워져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세력 내에서도 경제·노동 문제는 사회주의, 여성 문제는 페미니즘의 시야로 보려고 하는 절충주의적인 태도가 팽배하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사회주의자들의 몫이 아니라고 여겨져 왔던 여성 억압의 문제를 사회주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열렸다. 발제문은 ‘(1)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이 고양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여성억압이 다른 억압과 맺는 관계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3)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진보세력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답하고 있다. 토론문은 발제문 내용 중 강조하고 싶은 점이나 추가하고 싶은 점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1. ‘지금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 및 그 근본 동력’에 대하여

- 문재인 정권 및 사법부, 국가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

(1) 자유주의 정권의 ‘보여주기’식 여성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본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해지자, 3.8 여성의 날에 열린 ‘한국여성대회’에 축사를 보내며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이며, “촛불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통령으로서 사명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광복절 경

측사에서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고 말하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것이 보여주거식 ‘이벤트성 정치’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행보를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남녀 임금 격차 감소, 2)여성 주거안정 정책 이행, 3)여성 장차관 비율 확대, 4)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5)여성가족부 기능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수립을 5대 ‘여성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직후 가장 빠르게 추진된 것은 3번, 5번 공약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 19명 중 4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내각의 약 30%를 여성으로 채웠고, 관리직 공무원과 공공부문 임원 중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었다. 올해 초에는 5년 안에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 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 에서 20%까지 높이고, 이를 위해 각 공공부문에 ‘여성대표성 지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다수의 평범한 여성들의 삶과 관련된 나머지 공약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굳이 꼽자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센터인 ‘새로일하기센터’가 신설된 것, 호프집에서 ‘퇴근길 국민과의 행사’를 열어 경력단절 여성의 고충을 들은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권은 다수의 여성들이 실감하는 임금격차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함으로써 여성 문제에 대해 자유주의 정권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여성 정책에 몰두했다는 것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정부 및 공권력의 태도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2) 디지털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공권력

작년 9월 26일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6단계로 나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보고되었다. 당시 청와대는 ‘몰카를 찍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 ‘몰카를 유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모두 몰수하겠다’는 처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

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불법촬영물이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남초 커뮤니티나 웹하드 등의 사이트에 대한 공개적 수사 및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3.4배 가량 늘었고(2018. 8. 19, <성범죄자 징역형 줄었다>, 경향신문) ‘국산 야동’이라 불리는 불법촬영물은 구글 검색만 해도 쉽게 찾을 수 있는게 현실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처벌 강화 계획만 말할 뿐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다. 불법촬영물에 대해 집중적 수사를 진행할 ‘불법촬영물 유포 카르텔’ 특별수사단은 수사 및 처벌 계획에 대한 정부 발표가 이루어진지 1년만에 꾸러지게 되었다.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시위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자 특별수사단이 겨우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여성들이 현재 ‘홍익대 사건에 대한 판결’과 ‘위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편파수사, 편파판결이라 분노하는 것에는 정부의 이런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 지난 5월, 홍익대 사건 가해자 구속 이후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 측에서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사건이 화제가 되면, 경찰도 사람인지라 압박감이 듭니다. 특히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면 ‘윗분들’이 관심 갖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게 아니라, 언론에서 계속 썰대니 빨리 잡힌 거로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만약 여성이었어도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건이라면 신속하게 검거됐을 겁니다.” (2018. 5. 15., <남성이 피해자인 ‘홍대 누드 몰카’ 수사, 빨랐던 진짜 이유> 조선일보)와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더 빠를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성범죄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피해자인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여성 억압적 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뒤바뀔 경우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¹⁾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더 박차를 가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가 평범한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건인 경우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수 여성들의 주장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1)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최근 5년간 몰카 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48건 가운데 1523건(98.4%)이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였다. (2018. 5. 13. <몰카 범죄 처벌에도 ‘性차별?’ 청와대 청원 28만 돌파>, 조선일보)

위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웹하드나 텀블러 등의 사이트에 대한 전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수년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경찰이, 연일 화제가 된 위마드에 대해서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 혐의를 적용시켜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단순히 ‘여성인 가해자가 처벌받아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평범한 여성일 경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여성억압적 사회에 분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형성되는 여론을 토대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가로 인해 여성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3)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린 사법부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8개월 간 수행비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안희정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재판부는 안희정이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의연한 태도로 비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판결 내용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다. 무죄판결 선고 당일(8.14)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긴급집회에는 약 400여명이 참가했으며, 18일에 열린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는 약 2만여명이 참가했다(모두 주최측 추산). 집회에 참가한 많은 여성들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법부와 국가가 나서서 성범죄자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국가와 사법부는 정의와 공공선의 담지자가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쪽에 힘을 실어주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여성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근본 동력에는 여성 문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에 급급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과 성범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공권력,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엄격한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여성들은 그동안 누적된 경험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여성억압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직접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롭게 여성해

방운동에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은 공권력과 국가 그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설명하는 여성억압’에 대하여

위에서 지적했듯이,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은 나날이 확대·강화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일상에서 성폭력을 마주하는 삶, 임금격차·경력단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삶, 각종 성차별적 문화에 의해 고통 받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오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많은 여성들이 깨달은 것이다. 물론 성소수자나 난민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이고, 여성이 아닌 사람들은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 또한 가시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성해방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모두 그러한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누적되어 있던 모순에 대한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여성해방운동이 고양되는 흐름은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듯 여성해방운동이 강화되는 흐름은, 사회주의자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읽힌다. 사회주의는 보편적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사상으로, 여성해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제문에서 지적했듯이, 아직 대중들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진보 세력 내에서조차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라는 말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이번 항목에서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무엇이고, 페미니즘의 여러 조류에 비해 어떤 강점을 가지는지 짧게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강점

(1) 관념론, 기계론적 유물론과 역사유물론

발제문에 나와 있듯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여성억압의 문제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 발전이라는 총체적인 틀 속에서 이해”(발제문 p.4)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 ‘역사 유물론’이라는 철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맑스는 그가 활동할 당시 지배적인 철학적 세계관이었던 관념론과 기계적 유물론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역사유물론을 제시했다. 헤겔에 의해 발전된 관념론은 의식을 통해 사회적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철학적 입장으로, 인간 사회의 변화·발전의 원동력을 ‘변증법적인 의식의 발전 과정’에서 찾았다. 의식의 발전을 통해 인간 소외, 즉 ‘억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관념론의 핵심 주장이었다. 맑스가 ‘기계적 유물론’이라 분류한 것은 의식의 부리에 ‘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실천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발전해왔다는 것을 간과한 철학적 입장이었다. 역사유물론은 ‘인간의 존재는 그의 의식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물질적 조건은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행위인 생산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관념론과 기계적 유물론의 한계를 극복했다. 즉, 역사유물론은 기존의 관념론으로부터 (변화와 발전의 메커니즘인) ‘변증법’을, 기계적 유물론으로부터는 ‘모든 의식의 기원은 물질세계’라는 사실을 건져 올린 것이다. 이는 인간 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억압의 문제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맑스주의 철학에 대해 다소 지루한 설명을 한 이유는, 관념론, 기계적 유물론과 구별되는 역사유물론의 강점이 페미니즘의 여러 조류와 구별되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입장에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자체를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삼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입장은 ‘기계적 유물론’, ‘젠더 이데올로기’를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보는 입장은 ‘관념론’에 대응된다. 지금부터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여성억압의 원인을 추적함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여러 조류와 갖는 차별성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2) 급진 페미니즘에서 나타난 기계적 유물론의 한계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적대적 계급관계로 설명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나타났다. 이들의 주요 과제는 ‘남성 지배, 여성 종속’ 체제에서 나타나는 성모순을 기본 모순의 위치에 끌어다 놓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급진 페미니스트들 중 한명인 솔라미스 파이

어스톤은 성모순의 근본원인을 여남의 생물학적 성차에서 찾았다. 그녀는 여성이 임신·출산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압적인 성별 분업이 탄생했다고 보고, 여성억압을 해소할 방안으로 ‘인공생식’과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 출산을 하면서도 남성과 평등하게 살았던 시대”인 원시 공산주의 사회의 존재가 설명될 수 없었다. 즉, 파이어스톤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이 억압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의식(여성억압적 이데올로기)의 기원인 물질적 조건(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그러한 물질적 조건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역사적으로 변화해왔으며, 그러한 변화의 근저에 인간의 생산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이어스톤류의 주장은 일종의 ‘기계론적 유물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도 여성억압을 비역사적 산물로 만드는 ‘생물학적 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파이어스톤류 외의 급진 페미니스트들도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인종이나 속한 계급이 다를 수 있다’, ‘여성억압 뿐만 아니라 인종적 억압, 계급 억압 또한 고려해야한다’는 비판을 직면하게 되었다. 주로 이런 비판은 일명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라 불리는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계급적 억압을 설명하지 못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맑스주의의 개념을 활용한 한편, ‘맑스주의는 계급환원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성억압을 설명할 때는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가부장제’ 이론)을 차용했다. 이들은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한계인 생물학적 결정론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3)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 나타난 관념론의 한계

많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하의 여성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남성 노동자와 자본가계급이 공모하여…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차별받게 되었다”(발제문 12쪽)고 주장하며 ‘남성의 여성 지배’와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를 연결하려 했다. 그 중에서도 파급력이 컸던 것은 ‘여성은 마땅히 남성을 보필해야한다’는 이데올로기에 현혹된 남성 노동자들이 여남 노동자의 분열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자본가와 함께 여성들을 가정 내로 몰아넣었다는 미셸 바렛의 주장이었다. 그녀는(영국, 미국 등

지에서) 1)특정 직종에서 여성 노동을 금지하고 여성 노동시간을 제한한 보호입법과 2)남성 숙련 노조의 여성 배제로 인해 여성 노동이 주변화 되었는데, 이 두가지흐름이 젠더이데올로기로인해형성되었다고밝혔다. 하지만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 보호법과 숙련 직종에서의 여성 배제는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적 구조가 퍼질 때로 퍼진 뒤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분리된 가부장적 체계(‘가족-가구체계’)에서 여성억압의 기원을 찾으려고 한 바렛은 ‘왜 하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가정에 남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다.’는 허술한 답을 내놓았다. 다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 또한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데올로기’ 등을 언급하며 바렛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답을 내놓았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 여성이 공유하는 물질적 조건(임신·출산·수유 등이 가능한 신체적 조건) 자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이들은 여성의 임신·출산 가능성이라는 물질적 조건은 물론,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물질적 토대가 갖는 힘 또한 간과했으며, 양자가 맺는 관계를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억압이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강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주장은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젠더 이데올로기의 극복)를 통해 현실의 변화(여성억압의 철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관념론에 불과하다.

물론 가부장적 구조가 단순히 이데올로기가 아닌, 물질 토대로 인해 지탱된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 또한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질라 아이젠슈타인, 하이디 하트만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생산’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있다면, 가부장제는 임신, 출산, 가사, 양육의 등 ‘재생산’이라는 토대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생산 노동을 ‘남성의 영역’에 두고, 재생산 노동을 ‘여성의 영역’에 뒤서 자본주의 착취구조와 가부장적 구조를 연결 짓는 다음과 같은 분석은 한국 진보 세력 내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맑스주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먼저 맑스는 ‘생산’과 ‘재생산’을 분리된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 ‘재생산’은 ‘생산’의 유지, 지속으로서 생산의 객체적 조건과 생산자인 인간을 갱신하여 생산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과정으로, ‘생산’ 그 자체와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의 토

대가 되는 ‘생산’, ‘생산노동’을 ‘재화의 생산’, ‘경제영역에서의 생산’의 의미로 좁혔지만, 본디 ‘생산’은 인간의 생산, 즉 번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맑스·엔겔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생산의 세 번째 전제가 “자기 자신의 삶을 나날이 새롭게 만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만들어내 번식시키기 시작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²⁾ 즉, 재생산과 생산은 애초에 분리될 수 없으며 생산 자체가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구조의 물질 토대는 재생산이라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오류 위에 서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가부장적 구조가 남성이 여성의 노동력을 통제하는 재생산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 페미니스트들은 바렛과 마찬가지로 ‘왜 하필 여성이 남성에게 지배받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들은 여성에게 서비스를 받고자 한 남성의 욕구, 즉 남성의 지배 욕구로 인해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회정치제도가 가부장적 억압의 표현이라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기계적으로 병렬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관념론으로 빠지거나,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되돌아가는 한계를 보이게 된 것이다.

(4)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기계적 유물론과 관념론의 극복

물론 토론문은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여러 주장 중 일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적힌 내용만을 가지고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기계론적 유물론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관념론으로 구분하긴 어렵다. 한 가지 주장 속에 두 가지 한계가 모두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페미니즘 내에는 급진주의, 사회주의 조류 이외에 셀 수 없이 많은 조류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세세하게 다루지 않은 주장 모두, ‘페미니즘’의 틀 내에 있는 한 관념론과 기계적 유물론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물질적 생산’의 틀 속에서 여성억압을 분석함으로써 기계론적 유물론과 관념론 모두의 극복을 모색하지만, 페미니즘은 (어떤 조류든) 여성억압을 분석하는 데 있어 물질적 생산의 틀 바깥에서 다른 설명틀을 찾고자

2) 칼 맑스·프리드리히 엔겔스, 김대웅 역, 『독일 이데올로기』, 두레, p. 69.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물질적 생산'의 문제를 핵심에 놓았기에 여성억압의 기원과 자본주의 하의 여성억압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었다.

(4)-1 여성억압의 기원에 관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입장

여성억압의 기원에 대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여성이 주로 채집을 담당하고, 남성이 주로 사냥을 담당한 원시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 이상으로, 혹은 최소한 동등하게 식량 생산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렵채집을 하며 유랑생활을 하는 것보다 농경생활을 하면서 정착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 오랜 시간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고, 이에 후자의 생존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한편 농경사회 안에서 정주촌락이 형성됨에 따라 굳이 유랑생활을 할 때처럼 출산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잠재적인 경작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집단의 생존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여성의 생애에서 임신·수유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생산력의 발전으로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도구(쟁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사회적 생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여성억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듯 원시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억압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임신·출산 가능성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근력)이 정주촌락이 구성된 중농업 사회에서는 억압의 요인으로 작용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과 상호작용한 과정(물질적 생산의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단순히 여성의 생물학적 성차나 남성의 약탈적 본능으로 위 과정을 설명할 경우 여성과 남성이 평등했던 원시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4)-2 자본주의 하 여성억압에 관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입장

자본주의 하의 여성억압 또한 마찬가지다. 발제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산업화

초기 시기 노동자계급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족 중 한 명을 가정에 남겨놓아야 했는데, 그게 하필 여성이 된 이유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과 양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한 명의 여성 노동자가 수유 등의 이유로 쉬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 필요를 전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처럼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자본가는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급 생리휴가, (부모 모두를 위한) 출산휴가, 무료 탁아소 등”의 제도를 마련하면서 추가적인 가변자본을 지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이에 여성 노동력은 필연적으로 열등한 노동력으로 고착되게 되었다(발제문 16쪽). 즉, 자본가들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인해 임신, 출산이 가능한 여성들은 노동에서 배제되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여성들은 집에서 가사일이나 해야 한다’,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열심히 일 하지 않는다’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억압을 만든 ‘주범’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적인 토대 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산물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

이렇듯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들이 가정에 종속되고, 열등한 노동력으로 고착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기계제 대공업으로 이행하던 시기 노동자계급의 생존 조건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특징이 고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으며, 젠더 이데올로기를 결정요인으로 내세우는 관념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단순히 맑스주의 이론의 일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계급 억압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질적 생산’에 강조점을 두고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여남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여성억압 강화시키는데 해운 역할이 적다고 생각해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이 억압의 요인이 되고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힘을 얻게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질적 생산’에 강조점을 두고 페미니즘과 구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견지할 때 ‘자궁을 가진 여성들만이 여성억압을 깨뜨릴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해 (‘운동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원칙적 수준을 넘어서는 반박을 할 수 있고, ‘자본주의는 여성해방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주장을 보다 더 자신감 있게 펼칠 수 있다.

“...각 선조로부터 각 세대가 물려받은 물질적 성과, 생산력의 총합, 자연에 대한 그리고 각 개인들 상호간의 역사적으로 창조된 관계”속에서 여성이 속한 위치를 바라볼 때, ‘여성 억압을 역사적 산물로 인식해야한다’는 여성해방론의 전제가 공문구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념론적 허구들이 도출되는 현실적 사회적 관계의 실천적 전복”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하고 싶다.

3.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과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이유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지니는 강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과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발제문 내용 중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토론문을 작성하였다.

(1)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현재 여성해방운동의 흐름 속에는 다른 소수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생물학적 여성으로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를 제한하는 ‘정체성 정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이들은 과격하고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온건하고 체제순응적인 정체성 정치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주최한 ‘불편한 용기’ 측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청장, 검찰청장, 판검사 등 고위직 공무원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재인 정권은 이미 장관 여성 비율 확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등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다수 여성들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변화 없이 고위층 중 여성비율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발제문에서 지적했듯이, “그들의 ‘여성 우선’ 입장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오히려 진보적 담론을 전혀 학습한 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여성해방운동이 폭넓게 확대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발제문 6 쪽)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은 새롭게 여성해방운동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깨닫고 급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촬영, 디지털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의 흐름에 동참하면서도,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정체성 정치의 한계점을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여성해방운동에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여성 정책과 공권력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사법부의 시대착오적 판결로 인해 공권력과 국가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사회주의 세력은 이와 같은 급진적인 인식이 구체화되고 확산되어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회주의, 진보세력 스스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확실히 정립하고 체화하여 주체를 재정비한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변화·발전하는 틀 내에서 여성억압을 설명함으로써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은 물론 여성억압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하지만 사회주의, 진보세력 내에서도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여성해방론이 구축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노동문제 혹은 다른 소수자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절충주의적 태도가 사회주의 세력 내에서도 일반화 되어있다.

하지만 여성해방운동이 확산되는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가 여성억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전망을 가진 사상이라는 것을 알려내지 못하면, 사회주의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말 것이다. 발제문에서 지적했듯이, “변화하는 정세에 대처하려면 사회주의, 진보세력도 소극적, 보수적 태도를 극복하고 학습을 통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확실히 정립, 체화해야 한다.”(발제문 25쪽)


(3) 대중에게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알려내서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한다.

여성억압에 맞선 운동이 고양되면서, 여성억압의 기원과 여성해방운동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대중들의 욕구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이 여성억압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

‘페미니즘’과 구별되는 여성해방론을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더욱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는 활동가들도 있다. 하지만 수구 반공 세력이 점차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점차 열릴 것이다. 본인은 현재 대학 내에서 ‘맑스주의 여성해방론’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 한번도 ‘사회주의’를 접해보지 못한 대중들이 사회주의 관점의 여성해방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다. 세미나 구성원들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변화·발전하는 틀 속에서 여성억압의 기원을 분석할 때, 막연히 떠올릴 수 있는 본능론(‘남성의 약탈적인 본능 때문에 여성억압이 탄생했다’)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답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과거에는 남성의 일로 여겨진 직업이 현재에는 여성의 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ex-교사)를 봤을 때 (‘여성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더 적합하다’라는) ‘젠더 이데올로기’만으로 성별직종분리를 설명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자본주의 하의 여성억압’을 설명하는 방식(‘자본주의 생산과정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충돌을 일으켰다’)이 성별분업, 경력단절, 임금격차 등의 현실과 맞닿아 있으므로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조건을 바탕으로 힘을 얻는다’,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성차별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어떤 물질적 조건을 바탕으로 힘을 얻게 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생산의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여성-남성의 관계를 봐야 한다’라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주장은 대중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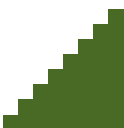
사회주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페미니즘이 여성해방을 추구하는 유일한 사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는 본인의 경험만을 토대로 하는 주관적 인식이 아니다. 여성억압에 맞선 운

동은 국가나 공권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여성억압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는 대중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시점이 그러한 현실의 벽을 깰 수 있는 적기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사회주의 또한 여성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내야 한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토론문 ②

중심모순의 전제를 바꿔 다른 해방 전략을 기획해야¹⁾



나 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발제자는 글의 소결에서 “여성억압과 계급억압 모두 생산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원인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출현했고, 오늘날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성별 임금격차, 성별 직종분리 역시 자본가나 남성 노동자의 성차별적 인식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성맹적(gender-blind) 특성 자체가 더 주요한 원인임을 확인했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물론 필자의 말대로 물질적 생산이라는 문제는 여성억압을 이해하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근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를 분석하면서 계급억압이나 여성억압 중 하나의 모순만을 중심모순으로 설정하는 것은 한계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성맹적’이라면, 그 문제 역시 자본가나 남성 노동자의 성차별적 인식과 분리된 문제가 아니며, 나아가 바로 그 성차별적 인식 자체가 단순히 문화적이거나 규범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에 근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절대 추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며,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성맹적’ 특성에는 이 생산 체제를 성맹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1) 이 글은 토론용 참고자료이며 완성된 원고가 아닙니다. 이 글은 곧 출판될 <교차성x페미니즘>에 실린 필자의 글 ‘페미니즘과 퀴어, 그리고 적녹보라 패러다임’ 중 일부를 포함하여 필자의 다른 강의안과 발표된 원고에서 많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자본주의적 생산이 '성명적'인 이유는 '성명적이어야' 더 많은 착취와 이윤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임금노동과 상품생산 영역만을 전제로 한 분석을 넘어서야 전체 체제의 근간이 보인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에서는 이 체제를 하나의 중심모순을 놓고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녹보라 패러다임'을 통해 파악하고, 현재의 체제를 '가부장체제'로 분석한다.

적녹보라 패러다임을 통해 분석해 보는 가부장체제

적녹보라 패러다임은 노동, 생태/환경, 여성 운동 등 각 운동 영역 간의 연대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며 상호교차성의 개념과도 다르다. 교차성 이론이 다층적 억압구조와 그 교차점에 놓인 주체들의 위치를 드러내고 이를 정치화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면, 적녹보라 패러다임은 애초에 억압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설정을 달리하고 운동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데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적'은 노동과 계급의 문제를 이 세계의 주요 모순으로 다루는 이론과 실천을 의미하고, '녹'은 생태/환경, 종(種)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과 실천을, '보라'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한 모순으로 파악하는 이론과 실천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운동이 주로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의 중심축을 놓고 체제에 대한 분석과 변화를 위한 실천을 모색해 왔다면, 적녹보라 패러다임은 현재의 체제를 이 모순들이 역사적으로 연동되어 작동해 온 구조로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모색하는 운동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갑희는 『가부장체제론과 적녹보라 패러다임』에서 현재의 체제를 '가부장체제'로 정의하고, 가부장체제의 구체적인 작동 구조로 '성종계급체제', '자본군사제국주의체제', '지구지역체제'라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성종계급체제'의 문제의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

가부장적 성체제에 대한 성 투쟁은 여성의 일이 생산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라고 하는 체제에 대한 투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 투쟁은 혐오, 차별, 불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 차원을 넘어 그것이 만들어내는 물질 조건들에 대한 투쟁을 의

미하며, 이 투쟁은 이데올로기적 싸움이면서 더 나아가 그 구조적 조건, 물질 조건을 바꾸는 싸움을 의미한다. 성체계론은 성적 노동을 하는 주체들이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싸움과 기존 노동운동의 전환을 위한 이론이기도 하다.

...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연동관계로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가부장제체를 성중계급체로 정의하고, 성체계를 기반으로 종과 계급체계를 말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종과 계급도 체계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성과 종과 계급체계는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성중계급체계는 성이 계급과 연결된다는 말이며, 성과 종이, 종과 계급이 중첩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운동적 의미,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각자 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동시에 연동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는 의미다. 이 셋을 따로 그리고 하나의 체계로 본다는 것은 행동의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

즉, 현재 전 지구적 영향과 동시에 지역적 맥락이 함께 연동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차원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관계를 임금노동을 중심으로만 설정해 온 방식, 생태/환경과 종 차별, 종 착취에 관한 문제를 단지 '인간 대 자연'의 구도로만 설정해 온 방식, 성적 억압과 차별, 착취를 성별 관계와 성적 관계를 중심으로만 설정해 온 방식을 넘어 이 모순들이 연동되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억압을 규명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이 억압의 구조가 결국 성적 지배 구조를 통해 세계를 움직여 온 하나의 제도, 체제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규명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성적 지배구조'란 단지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성별이분법과 남성 중심의 이성애 가족 제도를 통해 체제를 작동시켜 온 일련의 방식과 역사를 관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고정갑희, 『가부장제체론과 적녹보라 패러다임』, 도서출판 액티비즘, 2017, 22-23쪽.

그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여성과 아이, 노인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남성 가부장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온 지배 구조,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사유재산이 부계를 통해 상속되도록 만들어 온 역사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 가사/돌봄/출산/양육 등의 노동을 비가치화 하고 이를 1차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뒀으로써 상품생산 임금노동 외부에서 잉여가치를 최대화하는 구조
 -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친족체계를 통해 성별에 따른 성역할과 섹슈얼리티를 규범화하고, 이성애-일부일처제 섹슈얼리티의 강화하면서 이를 통제해 온 구조
 - 이 과정에서 이루어져 온 남성들 사이의 여성 교환, 거래
 - 인간(노동력) (재)생산의 유지, 통제, 관리를 위한 섹슈얼리티의 통제
- 같은 문제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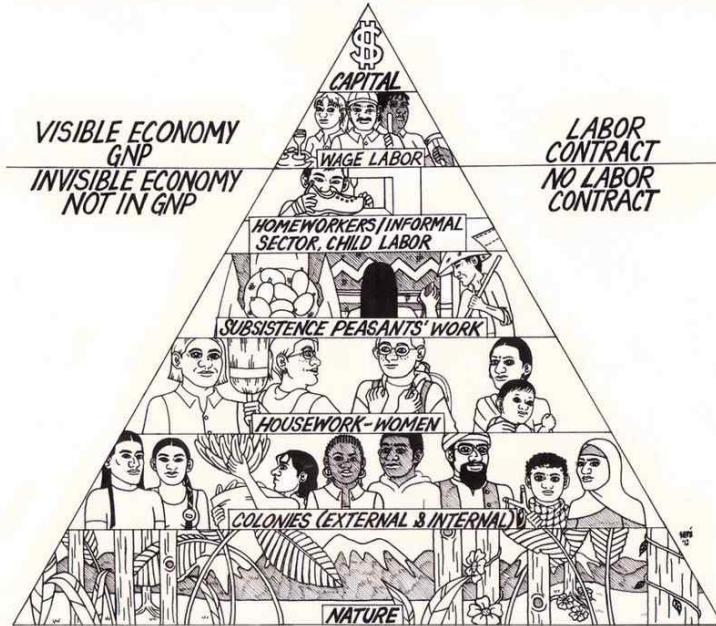
이러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는 더 규범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남성과 여성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신체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섹슈얼리티를 내면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연화'함으로써 통제가 아닌 '원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특히 여성은 자연과 같은 존재로 위치시킴으로써 여성과 자연 모두 대상화와 무상의 착취, 교환, 거래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자 해왔던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 주어진 성역할과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섹슈얼리티, 가부장적 가족체계, 인간(노동력)의 (재)생산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과 기대에 못 미치거나 거부하는 남성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별이분법과 이성애 섹슈얼리티에 어긋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성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배제, 낙인, 차별,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에서 도태시킨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성중계급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 | | |
|----|------------------------|--|
| 성 | 성별이분법 | 성별규범 |
| | | 성역할 |
| | | 성적 신체화 |
| | | 성별화 된 섹슈얼리티 |
| | 이성애 중심주의 | 이성애-일부일처제-배타적 성애의 섹슈얼리티 이성애 정상가족 모델의 규범화 |
| 종 | 자연과 인간의 분리 | 이성, 지능, 본능, 언어, 고통 등의 개념과 수사를 동원하여 동물 종과 인간종을 분리 |
| | | 착취/수탈 가능한 자연과 보호/유지/관리해야 할 자연의 분리 |
| | 인간 종 사이의 분리 |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과 '자연에 가까운 인간'의 구분 |
| | | 비규범적이거나 그 사회의 정상성 기준에 맞지 않는 인간 집단의 종별화 |
| 계급 | 자본과 생산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른 계급 | |
| | 성적 계급 | |
| | 문화적/사회적 계급 | |

아래 그림은 우리가 지금은 자본주의의 생산관계를 임금노동만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훨씬 더 방대한 비공식, 비임금 노동과 무급노동, 그리고 자연의 생산과 노동이 이 체제를 떠받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이 일들은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되거나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들이다. 그런데 이 세계는 점점 이 무상의 노동으로부터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고 있다. 이주 가사노동자의 증가나 각종 폐기물의 이동, 종자 특허로 엄청난 이윤을 취득하는 초국적 기업이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야자 따는 원숭이가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인간 노동력을 대신해 하루 종일 거의 360일 동안 일을 하고 동시에 관광 자원이 된다. 적녹보라 패러다임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서로 연동되며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역들이 점차 시장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생식기술, 로봇기술, 바이오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만난다면 그야말로 '성중계급체계'의 '자본군사제국주의 체계' 차원의 작동과 '지구지역 체계' 차원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ICEBERG MODEL of CAPITALIST PATRIARCHAL ECONOMIES



이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와 이성애/남성중심/가부장제 가족주의에서 벌어지는 생산/재생산, 노동의 위계

-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가치 위계는 자본과 토지의 보유 여부, 노동의 효율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 생산물로서의 가치 평가는 교환가치를 지니는 재화, 지식과 기술, 농/축/수/임산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물질적 자본이자 생산물이라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은 점차 가치가 높아져 가면서 자본이 전유해가고 있다.
- 농/축/수/임산물은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취득(전유)하면서 생산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역시 인간 노동이 쌓아 온 지식과 기술, 자연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보와 매키니즘 등을 자본이 그 가치를 전유해가는 과정으

로 변화하고 있다.

-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과 토지,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지식/기술, 자연 생산물을 점차 모두 자본가가 전유해 가면서 자본가는 생산과 재생산 영역 모두에서 절대적인 '생산자'가 된다.

-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통해 물질적/비물질적 생산과 재생산을 하는 주체이지만 임금 노동의 영역에서 노동자는 노동자일 뿐, 생산자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임금 노동에서 생산자는 자본가가 된다.

- 여성은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은 1차적으로 '재생산' 영역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되며, 임신과 출산은 재생산일 뿐 생산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해 노동자, 생산자, 주체는 곧 남성으로 간주되며 여성은 임금노동의 영역에서는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다뤄지고, 비임금 노동과 가사/돌봄/임신출산/섹스노동은 비가치화, 비가시화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 폭력을 유지, 강화한다.

-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체계는 생산과 재생산 영역 모두에서 성인, 이성애, 남성, 비장애인, 비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가부장적 이성애 가족을 구성하여 비장애인을 출산/양육하는 것, 사회에서 요구되는 노동력 기준과 규율에 맞춰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교육, 관리하는 것이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유지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의 평가 요소가 된다.

- 또한 병들거나 일탈한 이들, 장애를 가진 이들, 나이 든 이들을 보호, 관리하는 것도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재생산 단위로서의 가족, 특히 여성의 몫이다. 가족이나 여성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이 가족 체계 안에 있지 못할 경우 이는 곧 '사회적 비용'으로 여겨진다.

- 성인, 이성애, 남성, 비장애인, 비 노인 중심의 가부장제는 자본주의-가부장체제의 효율적인 구조 유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규범을 단속, 통제하고 이를 통해 재생산을 통제, 관리한다. 때문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LGBT는 사회적 단속과 통제, 관리의 대상이 된다.

- 아동/청소년의 경우 임금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보호주의를 명분으로 생

산과 재생산 영역 모두에서 주체가 되는 것을 금지 또는 통제 당한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드러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학습’은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이야기 되지만 동시에 시장이 요구하는 노동력 재생산의 과정이기도 하기에 시장 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시스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모, 교사 등의 경제적 상황, 노동시간에 따라서도 아동/청소년의 삶과 시간이 크게 변화되기도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아동/청소년은 1차적으로 ‘재생산 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산과 재생산을 모두 하고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생산이나 재생산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모순된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

- 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은 모두 ‘미숙한 존재’,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며, 따라서 생산과 재생산 모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임신/출산 등을 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여겨진다.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성적 통제, 강제 불임 수술, 강제 임신중절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처벌을 통해 재생산을 통제 당한다.

- LGBT의 경우 최근에 변화하고는 있지만 이성애 남성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 하에서 ‘비정상적’인 변태 혹은 이탈자들로서 스스로의 존재도 있는 그대로 재생산되어서는 안 되며, 출산, 양육 등의 재생산 역시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존재들로 여겨진다. 차별, 혐오, 낙인, 처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생산을 통제 당한다.

(2) 이성애-비장애인-성인-남성 중심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산 관리 구조가 이야기하는 것들

- 임금 노동에서 노동력이 이성애-비장애인-성인-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과 권리/권력이 부여된다. 다른 구성원들은 이들의 노동력과 경제력에 의존하게 된다.

- 가족을 구성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역할 역시 남성이 아내를 찾아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을 기본 구조로 간주. 여성은 1차적으로 남성 중심 가계의 유지를 위한 재

생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제된다. 이는 여성 노동을 남성 노동과 달리 '임금 노동'과 '가사일'로 구분하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위치에 두며,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사/돌봄/양육 노동의 가치를 절하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재생산 노동을 노동의 영역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게 부여되는 이중적인 노동가치, 노동시간의 속성을 건드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 한편, 최근 청년층과 노년층의 빈곤, 고립, 자살률 등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이 부양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구조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구조는 더 이상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은 기존과 같은 가족 구조를 구성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고 청년, 노인들은 효율적인 노동력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 불안정 노동, 실업 상태로 내몰린다. 이 상황에서 청년들은 끊임없이 '아직 노동할 수 없고, 따라서 가족을 구성하거나 사회적 재생산을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자기 인큐베이팅을 해야 하는 예비 노동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 가족 구조에 종속된 존재로서의 아동/청소년은 '자립'이 어렵다. 아직까지 '자립하는/하려는 아동/청소년'은 일탈적 존재가 되거나 위기 청소년, '학교 밖/가족 밖 청소년'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 자립할 수 있는 자원이 없고, 친권은 절대적이다. 보호주의의 관점을 넘어서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의 담론과 요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족의 굴레가 절대적이다. 부양의무제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가족 아니면 시설' 밖에 대안이 없었던 사회에서 장애 운동은 '자립'의 담론을 만들어 내고 그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가족 밖, 시설 밖 장애인이 단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재생산 영역의 구체적인 의제들을 가족 밖으로 꺼내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이 가족이나 자립과 돌봄의 공동체, 임신/출산, 양육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의제화 되어 온 내용들을 재맥락화 하고 담론을 전환해야 한다.

- LGBT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거나 재생산을 한다고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수당, 사회복지, 주택, 연금, 의료 등의 영역에서 애초에 배제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

성에 결혼과 가족구성, 임신/출산, 양육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시민권의 자격을 얻는다고 전제되기에 이에 대한 요구나 압박이 끊임없이 따라다니지만 커밍아웃을 할 경우 해고나 차별,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될 각오를 해야 한다. 한편 임금노동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격차로 이어진다. 때문에 LGBT 운동에서 결혼할 권리와 가족구성권, 양육권을 주장할 때 이 지점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며 제도화의 요구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적 조건과 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3) 재생산에서 요구되는 가치들-정상성의 굴레와 기술의 개입

- '정상성'은 재생산 영역을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존재'를 재생산하고, 재생산되어야 하는 압박에 놓여있으며 '정상성'의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끊임없이 변화, 수정,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다. '정상적인 존재'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생산의 가치 기준과 위계가 정해진다.

- 그런데 이 정상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는 결국 가족 밖에서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지 않는, 효율적인 노동력으로서의 기준이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건강에 대한 기준, 특정 연령에 따라 기대되는 일정 수준의 발달지수와 학업 성취도, 신체 발달이나 외모에 대한 기준, 정신적 상태에 대한 기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모두 이 정상성의 기준을 둘러싼 투쟁의 영역에 놓여있다.

- 이러한 상황은 가족 단위 재생산의 책임자인 부모, 특히 엄마인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한다. 아동/청소년은 그 의무에 종속된 '재생산 되는 존재', '돌봄의 대상'으로서 자기 주체성을 발현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운데 이 상황은 부모와 자녀의 갈등구조로만 이해된다.

- '정상적인'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한다는 요구는 장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존재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생학적 기준은 장애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성적 경험, 가족구성,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에 속속들이 개입하며, 특히, 정상성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는 기술과 의학의 개입은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의 주체적 자기 결정권의 영역을 오히려 좁히고 있기도 하다.

- 기술과 의학은 점차 적극적으로 재생산 영역에 개입하고 있다. 특히 성형수술, 키 성장, 집중력 향상 관련 약물이나 주사, 산전검사, 유전자 선별 기술 등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점점 복잡한 질문으로 요구되고 있다.

무엇이 여성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나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

이 역시 임금노동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부딪힌 총체적 모순은 한국사회의 경제, 사회, 정치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어오는 과정에서 (생산과 재생산을 포함하여) 여성들의 생산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위해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통제했으며, 여성들이 이를 어떻게 내면화하거나 혹은 갈등해 왔는지, 그 과정이 현재 어떠한 모순에 부딪히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어느 정도의 단서가 보일 것이다.

2015년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선언을 시작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페미니즘의 물결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독이 터진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겉으로는 잠잠한 듯 보였으나, 이미 여성들이 체감하는 모순된 현실은 거의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현실은 당장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요 지표들만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2015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74.6%로 남학생의 67.6%보다 높다. 2009년 처음으로 남녀의 대학진학률이 역전된 이후 조금씩 그 격차를 벌려 나가다 7%까지 확대된 것이다.³⁾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꾸준히 앞서온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 같은 현상은 마치 마침내 ‘남녀역전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여학생들도 스스로 차별적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않았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기계발 메시지는 다른 사회적 조건에 신경쓰기보다 ‘노력’

3) 연합뉴스, ‘대학진학률 女학생 75%, 男학생 68% … 격차 갈수록 벌어져(종합)’, 2015.3.19.

4) 서울신문, ‘[단독] 여학생 성적이 남학생보다 높은 까닭은 …’, 2015.8.17.

과 ‘열정’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게 만들었다.

김현미는 2011년 발표한 글에서 신자유주의 개혁과 여성(또는 남성)이 형성하는 ‘mixed blessing’ 관계를 설명하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이 새로운 영역들에 권위와 정치적 권력, 경제적 자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전통적인 영역’은 약화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사회적 배제와 포섭을 만들어 나간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인적자원개발론’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줄 ‘인적담론’의 이미지에 맞으면 ‘젠더’를 초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주류 사회로의 진출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쟁력과 경쟁심이 강화되고, 따라서 집단적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운동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었다고 보았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능력이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차별은 이제 종식되었다고 선언되기도 하며, 때문에 여성을 집단적으로 ‘피해자화’하는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에 동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⁵⁾ 대학은 그런 조건들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학생회와 거대 학생조직 중심의 학생운동이 쇠퇴하고,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상황에서 여성주의 학회나 교지, 참여학생회 등의 활동은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 시기의 대학 여성주의 운동 활동가들은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남는 게 목적일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런데 정작 대학 밖의 실제 현실은 달랐다. 2015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지만, 고용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여성 고용률은 49.5%로 남성 71.4%보다 21.9%나 낮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1.3%로 남성 74%보다 낮았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았다가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는 30대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전형적인 M자 패턴도 변하지 않았다.⁶⁾ 실업률 수치는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2017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0대 여성 실업률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연속으로 같은 달 기준 최고

5) 김현미, 「여성노동, 신자유주의 그림자를 벗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의 삶」, 『2011 여성노동상담원교육 자료집-여성노동교육, 시원하게 다이빙하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11.

6) 한국대학신문, ‘여성 대학진학률 높아졌지만 고용률은 낮아’, 2015.7.2.

치를 갈아치웠다. 2016년 11월 20대 여성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0% 포인트 오른 7.3%였으며, 이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같은 기준 최고치였다. 반면 같은 해 남성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0%나 떨어졌다. 경기불황으로 신규 채용 시장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여성실업률은 2007년 5.2%에서 2016년 7.3%까지 꾸준히 증가했다.⁷⁾

문제는 이토록 모순된 현실 속에서 여성혐오가 점점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대학에서는 여학생휴게실 등이 역차별이라고 공격을 받았고, ‘김치녀’, ‘된장녀’ 같은 여성혐오 단어들도 계속해서 생성, 확산되었다. 2006년 모임을 시작해 2010년부터 사회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들을 벌이고 2013년 전 대표 성재기 씨의 한강대교 퍼포먼스 중 투신 사망 후 ‘양성평등연대’로 이름을 바꾼 ‘남성연대’나, 2010년 디시인사이드에서 시작되어 2011년 독립사이트로 개설된 ‘일간베스트’의 활동은 이 시기의 여성혐오와 역차별 주장의 주된 경향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던 확연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의 고통, 소위 ‘5포 (취업/연애/결혼/출산/주거포기) 세대’라고 불리는 ‘위기의 청년’ 담론과 ‘헬조선’의 현실은 남성들의 얼굴로만 재현되었다. 동시에, 정부와 미디어가 저출산 위기 담론을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레토릭은 점점 강화되었다. 성역할 구조의 변화와 기업 통제를 통한 고용, 노동 조건의 변화는 강제하지 못한 채, 민간보육 시설 확대와 난임, 출산 지원, 결혼 장려 등으로만 초점을 맞춰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당연히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 시점인 2011년경 이후로는 정책적 변화보다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통제하려는 경향만이 더 뚜렷해졌다. 시·도 지자체별과 지역 단위별로 가임기 여성의 숫자를 지도에 표시한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나, 여성들의 고스펙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기업 채용과정에서 여성들의 스펙을 불리한 요건으로 명시하고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소득과 학력수준이 낮은 남성보다도 결혼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⁸⁾는 이와 같은 저출산 대책 담론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7) 연합뉴스, ‘치솟는 20대 女 실업률 … 같은 달 기준 11개월째 최고’, 2017. 1. 1.

8) 원종욱,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 결정 요인 분석”, 제13차 인구포럼, 2017. 2. 24.

‘Yangpa’라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는 2016년 보도된 기사들을 정리하며,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여성혐오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여자는 남자를 기쁘게 하는 가슴이 부착되어 있는 생명체인데 마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궁까지 있다. 어떤 가슴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가슴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어디에 임신가능한 자궁이 많이 있는지는 행자부가 책임지고 홍보한다. 그런데 이 불량 개체들이 아이를 잘 안 가지려고 하고, 사회 진출이다 뭐다 해서 애들 비염이 심해지게 한다. 경찰로는 절대 안 보이고, 이쁘다면 특히나 그렇다. 가슴과 자궁은 있으나 뇌가 없거나 사고 능력이 좀 약해서 자기 결정권은 주면 안 되고, 사실 여자는 바깥 일도 잘 안 한다. 하기야 하면 안 되지. 집밥 먹을 기회가 줄어들니까. 그래도 결혼 시장에서 잘 팔리는 여성 객체는 연봉 4200 에 어리고 예쁘고 자산 2억이며 공무원인 여자다. 뭐 대강 지난 며칠 탐라에 떠다니는 자료로만 보면 이렇다. 참 쉽죠?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의 노동과 생산력, 섹슈얼리티를 관리, 통제해 온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임금노동 시장에서 여성은 2차 노동력 혹은 예비 노동력
- 저출산 위기 담론으로 국가 발전, 경제 성장 위기의 책임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성 책임으로 전가
- 가족 안에서는 무보수의 가사/돌봄/임신출산/섹스 노동, 가족 밖에서는 저임금의 사회 서비스 노동력으로 활용
- 직장에서도 돌봄, 이해, 정서적 포용, 분위기 조성, 부드럽고 섬세한 리더십 요구
- 노동유연화, 고용불안의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임신·출산, 돌봄, 가사노동을 동시에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추진 (일·가정양립정책)
-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 주체의 내면화 : 성적 자원을 포함하여 모든 자원을 스펙으로 동원할 줄 아는 여성 주체의 모델

cf. 섹슈얼리티 통제와 함께 여성혐오의 확산 → 정치사회적·경제적으로 원인으로 야

기된 불안정과 불안의 원인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국가적, 사회적 시도 확산 (저출산, 비혼, 임신중지, 고스펙, 고학력, 김치녀...) → 여성 집단에 대한 집단적 대상화, 폭력 문화의 강화. 이를 산업적,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구조 확대

⇒ 여성들이 부딪혀 온 모순의 폭발

- 국가는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돌봄의 시장화', '돌봄의 재가족화' 진행

⇒ 양 영역 모두에서 노동조건을 성별화와 여성노동의 부담을 강화

⇒ 여성 내부에서의 악순환 야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다음 해에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ISIS에 입단하겠다고 한 10대 남성이 시리아로 떠나고, 이에 대해 "IS로 간 김 군보다 무뇌아적인 페미니즘이 문제"라는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계기로 트위터에서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메르스 갤러리에서 메르스 감염의 시작을 소위 '개념없는 김치녀'의 소행으로 몰아가려던 남성 유저들에 맞서 미러링이 시작되었다. 다음 해인 2016년 강남 어느 노래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여성혐오를 표출한 한 남성에게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는 즉각적으로 추모의 현장이 조성되었다.

시스템의 부재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우리에게 내재된 불안이 단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였음을 확인시켜준 세월호 참사 이후, 여성들도 자신들에게 요구된 자기계발 주체로서의 내면화와 실제 시스템의 모순을 보다 명확히 확인했다. 그리고 사회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던 이슈들이 이전처럼 쉽게 여성들에게로 화살이 옮겨지려 할 때마다 그야말로 여성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불안도 증폭되었다. 이전에는 그저 개인이 감당할 몫이었던 불안의 원인들에 대해 실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언어를 찾아낼수록,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아낼수록 더 많은 불안들을 끌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4년 이후 다른 어떤 집단들보다도 여성 집단에서 이 불안을 적극적으로 사회의제로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형성된 것은 필요할 때에 페미니즘이 언어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시민권의 경계영역에 있었

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법적, 제도적으로는 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권리를 전혀 평등하게 누리오지 못했다는 감각, 그리고 여기에 자기 권리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긴 주제에 그 동안 너무 착하게만 양보하고 살아왔다는 인식이 더해졌다. 이제는 다른 권리 안 챙기고(“안 사요, 안 사”) ‘여성인권’만 챙기겠다는 선언은 한 편으로 ‘여성’이라는 위치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위치이면서, 동시에 그걸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이다. 같은 얘기를 트랜스젠더는 할 수 없다. 고용허가증 받아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난민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안전과 권리를 구성하는 경계가 나뉜다. ‘합법적’이며 태어난 그 자체로 이 땅에서의 권리를 지니는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적’이며 ‘변형된’, 아직 시민 영역으로 온전히 들어서지 못한 이들의 권리는 스스로 포기되거나 제한되고 심지어 추방되어야 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화살을 돌리는 대신 자신의 노력 부족을 탓하며 참고 있을 때, 절박함에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들이 ‘떼쳐서 특혜받는 이들’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누구나 청와대 청원으로 직접 정부와 대통령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청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전혀 평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편 분노와 고발이 이어질수록 남성-가부장 중심의 권력은 오히려 더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터져 나오는 분노를 가라앉혀 보겠다고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지만 결국 ‘보호’의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대책들이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주동자를 색출하겠다는 듯이 워마드 색출에 나서면서(하지만 당연히 워마드는 현 상황의 주동자도, 배후도 아니다), 청와대의 탁현민이나 미투로 고발된 가해자에게는 거듭 그들의 무죄를 확인시켜준다. 동시에 다른 쪽에는 ‘생물학적’ 여성들이 권력을 차지해야 한다며 박근혜의 업적을 다시 소환하고, ‘야망보지’ 프로젝트로 서로를 부추기면서 트랜스젠더와 난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신자유주의적 권리 주체’로 남은 여성들이 있다.

결국, 명백히 이는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의 정치사회가 그동안 불평등의 구조를 제대로 문제 삼지 않고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파이를 한 조각(의 아주 일부만) 떼어놓은 다음, 그 조각을 차지하는 것을 개인이 쟁취해야 할 권리로 인식하게 만든 결과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파이 한 조각을 안전하게 차지할 권리,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의 선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차별금지법, NAP, 낙태죄, 난민에 대한 태도는 거듭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 자격을 선별하고 강화하려 할수록 파이 한 조각을 둘러싼 갈등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커져가는 분노를 안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평등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운동장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이 운동장은 이미 편향적으로 권리 주체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민, 이성애, 가족의, 성인, 비장애인,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는 운동장에서 기울기를 조절하려는 싸움은 결국 파이 싸움이 될 뿐이다. 따라서 평등은 각기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운동장을 해체시키고 재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임금노동과 이성애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전제된 제도를 바꾸고 임금소득과 가족부양이 권리의 파이를 결정하지 않도록,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위계가 그에 따라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 권력이 폭력에서 보호해줄 가부장적 수호자를 자임하는 대신에 모든 이들이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게 해야 한다. 자격을 인정받을 경계를 쌓아가는 대신에 경계를 구분 짓게 하는 권력의 작동은 문제 삼고 해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연대’를 넘어선 공동의 문제설정과 공동의 대응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이 미투 운동에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문제를 현재 노동구조의 전제에서부터 연결시켜 함께 제기하고, 여성운동이 성평등을 성소수자를 ‘더하는’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대신 현재 정치경제에서의 성(섹스-젠더-섹슈얼리티)적 위계 구조가 교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문제를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난민이 시민으로서의 경계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보호나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운동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에서 상징적 진전을 이루어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에 기대거나 정치권력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운동장을 뒤집을 수 없다.

- 미투 운동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야기하는 본질적인 구조로서 생산, 노동에서의

성(섹스-젠더-섹슈얼리티)적 위계화와, 이 구조에서 비가시화·비가치화된 노동의 착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섹슈얼리티 관리·통제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낙태죄 폐지 운동은 낙태죄를 통해 유지되어 온 노동력 생산, 인구관리의 본질을 드러내고, 이를 위해 여성의 임신출산 노동과 섹슈얼리티 통제를 유지해 왔음을 폭로 하면서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이러한 부정의와 착취 구조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이를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정의의 실현과 연결시키는 재생산 정의 운동의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함

- 재생산 영역의 노동과 생산, 노동 가치를 드러내고 '노동시간'에 대한 재인식, 재조직화를 요구하는 운동 필요

- 이성애-비장애인-성인-남성 중심의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저출산 정책, 모자보건법, 일·가정 양립, 부양의무제, 주거, 연금, 간병/요양 등에 관련된 정책의 관점들을 가족에서 개인으로,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보장의 내용으로 전환시키기


- 효율성과 정상성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가족 중심의 재생산 담론을 드러내고 이를 위해 통제되고 있는 주체들의 성적 경험과 권리, 섹슈얼리티의 의제를 확장하기

- 성별, 신체에 대한 '정상성'의 기준과 담론을 해체시킴으로써 규범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 인간(노동력) (재)생산에 연관된 위계와 낙인, 통제, 처벌에 저항하고 섹스/임신/출산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기

- '자연적'이라거나 '비자연적'이라는 규정을 통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착취와 차별, 통제를 합리화하는 방식들에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기

- 성별이분법과 비장애인 이성애 가족 체계를 근간으로 작동하는 생산과 재생산의 위계, 노동의 위계, 효율성의 논리를 깨고 다양한 성적 실천을 노동, 생산/재생산의 담론에 연결시키기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토론문 ③



유 현 미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사건 대학원대책위원회

토론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더이슈로 많은 여성과 시민들이 거리에 결집하고 있는 지금, 누구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지향하고 실천할 지 논하는 자리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도 그 일환이 되길 바랍니다.

1. 먼저, 서울대H교수사건 대학원대책위 활동 경험(*별첨 참고)을 발제문의 문제의식과 연결해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발제문은 최근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는 현상의 원인을 ①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된 여성억압, ②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 심화, ③촛불집회 이후 집합적 자신감의 상승으로 분석합니다. 구조적 모순의 누적과 심화, 이에 맞설 주체의 역량화·세력화. H교수 사건도 학계의 누적된 성차별과 (교수)권한 남용의 구조에서 발생했고 그 모순이 다종다기한 대학원생 인권침해 현상으로 표출되어왔던 흐름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대학원 동료관계 속에서 공론화 역량이 형성되었고 이후 학부, 시민사회, 노조 등으로 확장된 연대관계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과 의미를 획득했습니다. 교수 징계제도의 허점과 비민주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가해자 교수에게 온정적인 교수사회의 '동업자문화'가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 업무에서 주된 의사결정권과 자원배분 권한, 상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 권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

으로, 여러 사건들의 피해 양상이 다양함에도 발생과 처리과정을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면 가해자-피해자, 처벌-보호, 피물-희생양이라는 이분화된 구도에서 벗어나 사태를 복합적으로 사유하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사자'를 가해자와 피해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영향력 안에 놓여있는 다양한 우리들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우리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목격자로서 어떻게 사태에 함께, 나름대로 개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는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의견을 존중했지만, 사건의 규정과 대책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피해자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박, 대응하거나 감화받으면서 대책위의 인식이 심화되었습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고 유연한 공론화 과정으로 가능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공론화 역량을 쌓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교수 갑질이 교수 개인의 인성이나 처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갑질'이란 인격화된 혹은 이분법적(갑-을) 권력 인식으로는 문제를 개념화하기 불충분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조양호, 조현아를 욕하고 별주기는 쉽지만 한진그룹(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처럼요. 피해자이면서 때로는 공모자, 가해자가 되는 행위자들의 역동과 관계, 구조의 복합성을 제대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대학이나 징계위처럼 제도를 대표하는 얼굴(50-60대 보직 남성 교수)을 여성, 학생 등 소수자의 얼굴로 다변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에 대한 대안적 인격화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권력형 성폭력 문제제기는 한국 사회를 독점, 지배해온 남성-권력자의 종합적 민낯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2. 구조적 문제는 집합적 행동과 제도적 재배치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으로 활발해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인권침해 사건 공론화는 징계관련 법규 제·개정, 인권센터 의무화 설치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같은 당사자 조직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아탑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는 최근의 현상이 아닙니다.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권위주의적 구조의 공존은 사학재단 비리부터 시간강사 처

우 문제까지 여러 피해를 낳았고, ‘대학의 위기, 학문의 위기’ 담론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이 이러한 구조의 피해자이자 행위자로 주목받은 것은 최근입니다. 대학원생은 학계의 구조적 모순으로 착취, 피해 받는 집단이자 이 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학원생의 정체성과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학생-노동자 정체성의 공존, 활동의 성격(ex: 연구노동?)을 어떻게 개념화, 인정받을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도기적, 애매한, 중첩된 활동이라 여겨지는’ 집단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갱신과 실천이 필요할까**가 고민되는 요즘입니다.

3. 저는 최근 제기되는 젠더이슈에 대해 개인화된, 도덕주의적 인식이 아니라 구조적 인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발제문의 주된 문제의식 중 하나라고 봅니다. 또한 (피해자)정체성을 본질화하거나 그에 고착되는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구조적 설명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 발전이라는 총체적인 틀”, “물질적 생산의 문제”라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통일적 이론 하에서만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제가 경험한 대학원생의 문제나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 이론이 발제문 3쪽에서처럼 “성차별적 문화의 문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각종 폭력의 문제는 경제적 물질적 삶의 어려움과 관련이 적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그런 문제에 더 분노하게 되는 배경에는 분명 물질적 생존 자체가 녹록치 못한 현실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식의 **거시적 배경요인으로 외삽·접합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지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발제문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페미니즘 이론과의 차별점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초기농업에서 중농업 사회로의 이행에서 성별분업의 성격이 억압적으로 변한 것이 여성억압의 근본원인이라고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6쪽에서 “중농업 사회는 신체적 근력을 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점차 정주생활을 하게 되자 출산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많은 시간을 임신 상태로, 혹은 수유를 하며 보냈다(...) 여성들은 서서히 사회적 생산에서 남성에 비해 부차화”되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신체 형태와 활동 역시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변화해왔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현재 여남의 신체적 근력 차에 근거해 과거를 상상하는 방식은 아닐까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논리라면 물질적 생산에 기여하지 않아도

사회적 권위를 가져온 남성 성직자 집단은 어떻게 설명가능한가 란 의문도 듭니다. 사회적 생산, 물질적 생산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설명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요.

세세하게 적는 것은 토론문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저는 발제문이 여전히 물질적 생산과 재생산의 도식적 구분, 기존의 맑스주의적 생산 개념에서의 노동 문제만을 주로 다룬다고 느꼈습니다. 발제문 19쪽에서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직종분리 역시 자본가나 남성 노동자의 성차별적 인식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성맹적 특성 자체가 더 주요한 원인”이며, “페미니즘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어 온, 물질적 생산이라는 문제가 여성억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데요. 제가 이해한바 페미니즘의 문제제기는 물질적 생산을 덜 주목한 게 아니라 물질적 생산의 원천이면서도 비가시화된 여성 신체에 대한 국가와 권력자들의 “엄청난 폭력과 엄청난 관심(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202쪽)”을 지적하고 “임금노동, 가사노동, 성노동을 함께 봄으로써 (ibid, 154쪽)” 여성(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체제의 수탈, 착취, 동원을 총체적, 통일적 이론으로 설명해내려는 특정한 시도는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갈래와 한계를 노정하고 있지만요.

4. 가부장제 이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상호교차성에 대한 비판은 흥미롭게, 여러 사실들과 쟁점을 배우며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가부장제 이론의 한계에 대해 처음 접한 것은 페미니즘 강연에서였고, 서구 중심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한계는 한국 사회와 역사 속 여성의 현실을 분석한 한국 사회학자, 여성학자, 역사학자들의 작업(조은, 조순경, 배은경, 김원, 구해근, 김주희, 이임하 등등)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 논의나 연구 지형이 발제문이 상정하고 있는 그것과 매우 다르게 인지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발제문은 가부장제 이론의 가장 큰 한계로 여성억압에 대한 초역사적 접근을 지적하는데요. 저 역시 이론이란 구체적 역사와 사회에 기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발제문에서 서구 페미니즘 논자와 그를 비판하는 또 다른 서구 논자들의 논의를 서술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구체적 현실을 연구한 한국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의 쟁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까요. 저는 이

게 한국 페미니즘/여성학? 레퍼런스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더 너른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활용해 쟁점이 논의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운동가 김진숙의 자기재현을 분석한 김현경, 김주희의 논문("‘여성’노동자 김진숙에 대한 여성주의적 독해", 2012년)은 김진숙이 모범적으로 전유하는 노동자 남성의 ‘형제-가장’의 지위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한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남성 노동자의 아내가 아닌 여성이어야만 남성 노동자와 수평적 연대를 나눌 수 있다면,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지속할 수 있기 위해 아내라는 지위가 반드시 필요한 동시에 감추어져야만 한다면, 즉 구성적 배제로 기능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한다면, 여성 노동자들은 그 자체로 연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가 “민족의 맏아들”로 여전히 재현(““민족의 맏아들답게...” 양대노총 조선 직총 합의문 논란“, 2018.8.16., 충북인뉴스) 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성찰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 성희롱 및 인권침해 사건의 의미와 항방

1. 주요 경과

| | |
|-----------------------|--|
| 2016. 11월 말 | -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 결성, H교수 사건 자체조사 시작. |
| 2017. 3. 13 | - 대학원 대책위원회, 학과 교수회의에 참여하여 피해사실 공론화. - 교수회의에서 H교수의 학과장 면직/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과의 연락접촉 금지 등 대책위가 제안한 긴급조치 수용 결정. |
| 2017. 3. 14 | - 사회학과 내 사건대응 및 재발방지 조치 마련 위한 기구로서, 교수-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사회학과 인권위원회' 설치 결정. (17년 9월 정식 발족, 내규 제정) |
| 2017. 3. 22 |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 사건 신고. |
| 2017. 6. 15 |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 중징계(정직3개월) 권고 및 향후 2차피해 방지 위한 공간분리·접촉 금지조치 권고. |
| 2017. 7. 20 | - 사회학과 학부생, 'H교수 대응을 위한 학생모임' 결성 |
| 2017. 7. 28 | - 'H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연대' 결성.(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사회대 학생회,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H교수 대응을 위한 사회학과 학생모임) -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피해자, 인건비 횡령 건 국민권익위에 신고. |
| 2017. 8 ~ 2018. 3. | - 횡령 건 교육부로 이관되어 교육부 감사 진행. |
| 2017. 8. 9 | - 본부 징계위에 제출할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 졸업자/ 유학생 및 연구자 의견서 연서명(총 319명)완료. |
| 2017. 8. 10 |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H교수 사건에 대한 학부생/대학원생/박사졸업자 공동 기자회견" 진행 |

| | |
|-------------|--|
| 2018. 3. 21 | - 'H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연대', 본부 앞 천막농성 시작. |
| 2018. 4. 25 | - 교육부 감사 결과 통지. - 약 1500만원의 대학원생 인건비 횡령 사실 인정되어 3가지 조치 실시됨(①회수 조치, ②중징계 요구, ③고발 조치(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교육부가 H교수 고발)). |
| 2018. 5. 1 | - 서울대 징계위, 정직 3개월 결정. - 서울대 총장, "교육부 감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재심의 요청. |
| 2018. 5. 8 | - 서울대 총학생회장, H교수 파면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시작. |
| 2018. 5. 21 | - 서울대 징계위 재심, 정직 3개월 재확정. - 총장, "징계위 결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 의식에 비해 미흡하다"는 입장 발표. - 서울대 총학생회장 실신 후 입원. |
| 2018. 5. 24 | - 대학원 대책위 10명 전원, 징계위 결정에 반발해 집단자퇴서 제출. - 징계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H교수 복귀 수용 불가하다는 사회학과 교수진 입장서 발표. |
| 2018. 5~ 현재 | - 횡령 건 검찰 조사 진행. |

2. 쟁점

1) 이 권력관계를 무엇이라 칭할 것인가?: '갑질 종합세트'

- H교수는 2010년 부임 이후 대학원 지도학생, 학부생, 동료 교수,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된 H교수의 가해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인격모독적 폭언과 비하(폭언과 욕설, 무분별한 헐담과 비난)**: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통한 대학원 지도학생 및 교직원, 동료 교수에 대한 인격모독.("쓰레기다", "정신이 썩었다", "못 배워먹어서 그렇다" "너는 좀 맞아야 해", "미친X", "누구는 사회생활을 해본 티가 나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② **사적 업무지시**: 지도 대학원생들에게 수차례 자택의 냉장고 청소, 자택 곰팡이 제

거, 옷 수선, 자동차 운전,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타 용도 사용 위한 학생 명의 핸드폰 개통 등을 강요함. 또한 이러한 업무지시 목록이 담긴 파일을 드롭박스 공유폴더 등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 지속적으로 사적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요함.

③ **성희롱(성차별적 발언, 부적절한 신체접촉):** 학부생/대학원생/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어깨동무하기, 팔짱끼기, 등 쓰다듬기, 볼 만지기, 노래방 블루스,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성적 사생활을 이야깃거리로 삼기, 외모를 폄평,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가 있다는데 재가 딱 그 케이스다” 등의 발언.)

④ **학업, 연구권 문제(과도한 생활통제 등):** 대학원생들에게 명절·휴일을 가리지 않고 메일·문자·식사 요청을 보내며 언제나 항시대기 할 것을 강요, 대학원생에게 “공대 애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데 사회학생들은 엉망이다”라고 압박을 줌, 식사자리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식당에 좋은 자리를 예약하고 분위기를 뒤흔 것 등 ‘모시기’의 규칙을 만들어 강요, 이 모든 압박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 바다에서 못 해먹는다/졸업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애는 가르치고 싶지 않다” 등의 지위를 이용한 협박을 가함.

⑤ **연구비 회수 및 전용 등의 직권남용:** 대학원생 인건비 등을 갈취, 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지출함.(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생에게 별도로 관리하도록 시킨 후, 자신의 자동차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등 사적 업무를 학생에게 시킬 때, 그 비용을 이 전용된 인건비로 지출)

- 디테일하게 더 있지만...하나의 큰 건이 아니라 **일상을 갉아먹는 지속적 괴롭힘.**
- H교수의 가해는 **학계와 학과 내 생존/생활, 진로,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교수(테뉴어를 받은 서울대 정교수, 지도교수, 학과장) 권력**에서 비롯함.
- 대학원생과 조교·직원들에 대한 일상적 통제, **전인격적 지배관계 설립.** 피해자들을 학과 내 고립시킴.
- 장기간 피해자들의 자존감과 역량을 손상시키며 진행된 괴롭힘은 피해자들이 이를 문제 상황이라 인지하는 것, 적절히 대응/저항하는 것을 가로막음.

- 학부생들에게는 수업 시간 등에서 여학생에 대한 ‘편애’, ‘품평’ 등으로 **성차별적 교육환경 조성**.
- 그 결과 학과 공동체의 이반 및 학과 운영 왜곡이 심화됨. 이를 학과 공동체의 위기이자 구성원들에 대한 모욕·차별이라 인지한 대학원 대책위의 공론화 결정.

2) 제도적 공백과 한계: 어떻게 해도 ‘정직 3개월’?

- 이 사건은 단독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아니라 여러 피해자에게 다양한 양태로 발생한 다층적 괴롭힘(academic harassment)과 성차별·성폭력의 중첩)의 특징을 띠고 있었음.
- 따라서 여러 피해자와 사건을 **통합해 공론화하는 대책위 모델**로 사안 진행됨. 피해자들 및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 조정하는 대책위 역할(피해자 일부는 대책위 참여)이 중요시됨.
- 대책위 활동을 통해 대학원생과 학과의 자정능력, 역량 향상.
- 사안의 특성 상 법적 투쟁보다는 대학 내 해결 절차 따름.

-> 하지만, 우리는 대학 내 처리 제도의 공백을 목도했다.

① 인권센터는 성희롱과 인권침해 사안은 심의했지만, 연구비 횡령 건은 조사 권한이 없어서 징계 권고안에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대책위와 피해자는 횡령 건만 외부 국가기관에 신고. **교수에 의한 비위는 성폭력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교수-대학원생, 교수-직원 관계에서는 표절, 대필 등 연구윤리 위반, 연구비 횡령, 재정 비위 등이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것과 통합해 사안을 판단할 대학 기구 부재. **사안들을 통합해서 징계 양형이 되지 않음.**

② 심의위, 징계위 운영의 교수 중심성: 인권센터의 심의위, 본부 징계위 구성원들은 대부분 학내 교수. 외부 인사 참여 미비. 당사자나 소수자로서 여성, 학생 참여 보장되어 있지 않음.

-> ‘제식구 감싸기’, 교수 특권 보호하려는 ‘**동업자 문화**’ 발생(“얼마나 힘들게 얻은

대단한 서울대 교수 자리인데...”). ---> 가해자 교수에 동정적인 일부 타대/타과 학생들, 교수들의 탄원서.

③ **2차 피해를 막을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재:** 심의위 권고에서 징계위 결정까지 10개월의 시차. 이 기간 동안 ‘무죄추정의 원칙’ 들먹이며 임시연구실 요구, 학내 활보 등.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대책, 2차 피해 예방책, 대학원생 교육권(지도교수 변경, 장학금 등등) 보장책 등의 세세한 대책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 규정한 지침과 실행력 부재. 학과, 단대, 인권센터, 본부 간 역할과 권한 조정의 경험 없음. 그래서 매순간 학생들이 긴장하고 주의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골몰해야 했음.

④ **무법천지 교수사회? out-dated 규정, 또는 부재하는 규정:** 중징계가 정직1~3개월에서 해임-파면으로 양극화되어 있음. 따라서 웬만해서는(구속 정도 되는 건이 아닌 이상) **무슨 짓을 해도 교수는 정직3개월이다**라는 암묵적 룰. ‘서울대 교수’: 2011년 법인화 이후 교육공무원 신분도 아니라 사립학교법을 징계절차에 준용하는데, 준용할 뿐이지 사립학교법 규정을 또 꼭 따르는 것은 아님. 교수들 편의대로, 행정 편의대로 적용. 그런데 서울대 직원, 학생 징계(양정)기준과 규정은 세세하고 엄격함. **교수 징계 양정 기준은 법인화 7년째인 지금까지 없었음(지금 만드는 중이라 함).** 이런 불공정함이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을 한 학부생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과 대조되어 학부생들의 투쟁을 동력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징계위 결정 근거와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성과 반민주성.** 피해자에게도 절차 진행 시 어떤 알림이나 고려가 없음. 이렇게 일반 기업, 공무원 조직 등에 비해서도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징계 규정, 징계 결정 관행, 부재하는 규정들.

----> 이러니 교수사회는 봉건제 신분사회라는 말이 나옴.

3) ‘우리’의 확장이 가져온 대학 민주주의의 시금석: 연대의 의의

- 이 사안은 대학원 동료 관계의 복원에서 시작되어 **학부생들의 적극적 결합**으로 학내 전체 사안으로 확장됨. 그리고 졸업생, 교수진까지 결합한 **전 사회학계의 문제로 자리매김** 됨.

- 재작년 촛불시위의 시작과 함께 문제의식이 형성/구체화되었고, 올해 초 미투 운동의 폭발과 함께 커다란 전기를 맞이함.
- 학과교수진, 박사졸업생, 학부생, 대학원생 과반의 공동의견서. 이후 계속된 여러 단체들, 개인들의 지지자보, 의견서 릴레이. 서울대 전체가 H교수 자보로 뒤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보의 시대**를 도래시킴.
- 학내, 청와대, 국회 등지를 오가며 여러 기자회견, 간담회, 집회 등 참여하며 다양한 연대관계가 설립됨. 전국대학원생노조, 시민, 사회단체 등까지 결합한 **연대관계의 확장**. 현재 다른 대학 대책위나 다른 사례 피해자들과도 소통이 진행되고 있음.
- “대학을 지배하는 위계관계를 가로지를 더 많은 연대관계의 설립”은 이 문제를 대학 내 성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위치 짓고 있음.

3. 제언

- 교수직의 특권과 자율성은 전문직으로서 내부 자정능력, 윤리성, 합리성에서 비롯하는 것임.
- 이 사안과 현재 폭발하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은 이 자정능력의 실패를 보여줌.
- 따라서 **교수가 주도하는 현행 대학 내 절차에서 자율적 해결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함**. 그것은 오히려 가해를 방치,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외부 제도(국회, 교육부, 시민사회)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 인권센터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이 심화되어야. 각 대학 본부와 독립된, 권역별 통합 대학인권센터를 설립하는 게 나아보이기도 함.
-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상아탑의 성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징계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학(원)생 권리 증진과 역량화, 대학 내 의사결정, 권한 구조의 재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관건은 현재 대학의 권력관계를 재편하고, 다양한 연대관계, 주체화 모델을 정립할 **경험의 축적**임.

사회주의자

홈페이지: socialist.kr | e-mail: ksowebzine@gmail.com | 전화: 02-3785-1910
페이스북: [@ksocialist](https://www.facebook.com/ksocialist) | 트위터: [@kosocialist](https://twitter.com/kosocialist) | 텔레그램: [telegram.me/ksocialist](https://t.me/ksocialist)